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
- 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

이 만 열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

-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

이 만 열

I. 머리말

II. 韓末·明治期の 韓國史研究

III. 日帝強占期 韓國史 研究

IV. 맺는 말

I. 머리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 3분과에서 설정된 ‘근현대 한일관계 연구사’라는 과제는 근현대 시기에 걸쳐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국의 역사 혹은 한일관계사 자체에 대해 어떻게 연구했으며 그 성격이 어땠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근현대에 진행된 한국사 일본사 혹은 한일관계사 연구의 과정과 성격을 고찰하는 일종의 사학사가 될 것이다. 때문에 근현대에 전개된 한일관계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정리하는 연구사와는 구별된다.

‘근현대 한일관계 연구사’는 개화기에 몇몇 한국 역사가들이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일본의 한국사 연구를 원용한 것 외에는, 한국인에 의해서는 크게 이뤄진 것이 없다. 그 대신 일본인에 의해서는 한국사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 한국인의 연구가 적은 것은 일본사 혹은 한일관계사의 연구가 한국사의 주류를 파악하는 문제와 별로 관련이 없었던 데다가 근대 한일관계의 전개 역시 한국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일본인의 한국사 연구가 활발했던 것은 한국사 연구가 일본사의 주류를 찾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데다가 당시 한국 및 대륙진출에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일본인들의 한국사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사(한일관계사)의 연구는 큰 틀에서 본다면 세 시기-한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로 나눠 말할 수 있다. 한말의 경우, 일제가 한국 진출의 역사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다른 서구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사 연구가 자국의 한국진출이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에 들어서면 한국사의 진실을 캐려고 하기보다는 일제의 한국강점을 한국사를 통해 역사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위 ‘정체성이론’이나 ‘타율성이론’ 그리고 ‘일선동조론’ 등이 그 귀착점은 일제의 한국 강점을 정당화하려는 식민주의사관에 이르고 있다. 식민주의사관은 한국의 식민지화가 한국사에 내재한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마비시켜 굴종과 자기비하, 사대주의성과 의타심이 마치 한국인의 불변하는 민족성인양 식민지 교육에 원용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旗田巍 등의 한국사학자와 조선사연구회 등의 학술단체를 통해 한국사의 진실을 이해하는 바탕에 서서 한일관계사를 연구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198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식민지근대화론과 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사 연구에 큰 파장을 남기고 있다.

이 글을 초하기에 앞서 필자는 <19世紀末 日本의 韓國史研究>¹⁾와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주의사관>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前者는 19세기 말에 일본인들이 쓴 한국사에 관련된 논문과 저술을 분석한 것이었고, 後者는 江戶·明治시대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 말기까지의 日本의 한국사연구 및 그들 관학자들의 소위 식민주의사관의 형성과 내용에 관해先學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개괄적으로 이미 언급한 바 있다.²⁾

이 글에서 필자는 19세기 후반부터 日帝强占期 말까지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연구의 과정과 내용을 살피려고 한다. 아울러 그 연구가 그 후의 한국사 연구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살피려고 한다. 이 시기에 간행된 일본인들의 저술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선택적으로 살펴보겠다.

II. 韓末·明治期の 韓國史研究

<韓國史研究의 출발: 廣開土大王碑文 研究>

일본에서 한국학연구는 이미 江戶時代부터 시작되었다. 江戶時代에 한국에서는 10수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러한 양국의 修好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연구가 진행되었다. 당시 일본의 한국학 연구는 朱子學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林羅山·藤原惺窩·山崎闇齋 등 일본의 주자학자들은 李退溪의 학문에 접근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江戶시대에는 주자학자들 못지 않게 소위 국학자들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古事記·日本書紀 같은 일본고전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다. 이 國學的 思考가 막부말기의 征韓論과 明治時代의 한국침략·한국병탄·한국지배의 유력한 관념으로 이어졌다.

1850년대에 주어진 美國·露西亞의 충격은 드디어 幕府政權構造의 극복과 明治維新의 단행으로 나타났고 조선에 대해서는 雲揚號事件을 거쳐 江華島條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무렵에 뒷날

1) 李萬烈, <清日戰爭과 韓日關係>-日本의 對韓政策形成에 關한 研究-(一潮閣, 1985) pp.79~133 所收.
2) 李萬烈, <日帝 官學者들의 植民主義史觀>,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知性社, 1981) 所收, pp.259~286.

軍國主義體制의 핵심으로 역할하게 되는 참모본부가 참모국을 이어 등장하게 되었고, 1879년경부터 참모본부는 대륙진출을 위한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廣開土大王碑文의 검토 등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연구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근대적인 한국사연구가 대학에서 학문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되기 전에 정치·군사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明治維新 후 일본에서는 官·民 혹은 서양선교사들이 대학을 건립했는데, 오늘날 東京大學의 전신인 帝國大學이 건립된 것은 1877(明治 10)년이다. 이 해에 史學科도 창설되었으나 교수를 구하지 못해 곧 폐지되었고, 그 후 1887년에 다시 史學科가 설치된 데 이어 1889년에는 國史科가 增設되고 사학회가 결성되면서 적극화되었고, 그 기관지로서 《史學會雜誌》(1892년에 《史學雜誌》로 改稱됨)가 발간되면서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近代 歷史學은 이 무렵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³⁾

旗田 巍 교수는 淸日戰爭 前後에 일본 朝野의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이 강렬하였고 학계의 눈도 한국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연구가 한창이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 무렵의 한국사연구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사연구의 개척은 단순히 역사연구 영역의 한국으로의 확대라고만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향 즉 실증적·합리주의적 역사학의 성장을 야기시켰다. 그것은 國學·漢學의 계보 속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서양적 학문의 영향을 받고서 國學·漢學에 대항하여 탄생했다. 그것은 한국사·동양사의 開祖라고 일컬어지는 白鳥庫吉이 리스의 가르침을 받은 帝國大學 史學科(西洋史學 전공) 출신이며, 또한 같은 開祖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那珂通世가 福澤諭吉의 문하에서 洋學을 배운 사람이었던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연구는 서양사학·서양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⁴⁾

한국사연구가 서양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旗田 교수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일본의 한국사연구가 대학에서 시작되기 전에 참모본부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당시의 한국사연구가 시작된 것은 학문적 방법론상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본의 大陸進出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본이 滿洲, 蒙古, 西域, 中國 등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는 明治 30년대 이후에 한국사연구가 그다지 떨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한 말·명치기의 일본인의 한국사연구는 당시 그들의 현재적 관심의 강력한 표시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인 명분이나 합리주의적 방법론을 띠고 나섰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明治維新 후 1872년에 太陽曆을 실시하고 國家紀元節을 정하고, 그 이듬해에 참모국을 설립하여 조선과 중국대륙에 대한 지도작성 및 資料蒐集에 나서게 되었다. 참모국이 참모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이미 시작된 듯하다. 1882(明治 15)년 참모본부 編纂課는 <任那考>와 그 附錄 <任那國名考>라는 稿本을 찬술했는데 여기서 이미 任那日本

3) 일본의 근대적 역사학은 서양사학에 영향받은 바가 큰데, 프리만 Freeman, Edward A.의 The Methods of Historical Study가 1886년에, 베른하임 Bernheim, Ernst.의 Lehrbuch der Historischen Methode가 1889년에 일본어로 번역된다. - 今井登志喜, <西洋史學の本邦史學に 與へたる影響>, 《本邦史學史論叢》 下, p.1458.

4) 旗田巍,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史研究의 傳統>, 《日本人의 韓國觀》(李基東 譯, 一潮閣, 1983), p.126.

府說이 부상되고 있었다. 참모본부는 첩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879년부터 십수 명의 將校를 駐在武官 혹은 語學先生의 명목으로 淸國에 파견, 스파이활동을 전개했다.⁵⁾ 이 때 현역군인이 현지인으로 가장, 침투되기도 했는데, 酒匂景信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⁶⁾ 북경에 파견된 그가 만주 여행 중 얻은 廣開土大王碑文 榻本⁷⁾이 1883년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고대사 연구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참모본부 편찬과는 이榻本을 해독하기 위해 당시 저명한 한학자·역사학자들을 동원, 6년간이나 연구한 끝에 1889년 6월 3일 발간된 亞細亞協會의 잡지 《會餘錄》 제5집에 <高句麗碑出土記>가 발표되었다. 이 글은, 碑文解讀작업에 참여하였고 이 무렵 참모본부 편찬과원이며 陸軍大學校 교수이기도 한 橫井忠直이 쓴 것이다.⁸⁾ 橫井忠直의 이 글은 그 뒤의 학자들에게 자극을 주었는데, 뒤에서 언급될 바와 같이 菅政友·那珂通世·三宅米吉의 廣開土大王碑文에 대한 研究論文이 곧 뒤따르게 되었다.⁹⁾

日淺한 일본의 근대역사학이 광개토대왕비문 문제의 와중에 빠지게 된 것은 일본의 역사학계 특히 고대 한일관계사연구와 그 뒤에 전개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古代日本の 韓國出兵 南韓支配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과 ‘古代日本이 한국에 출병하여 남하하는 고구려의 대군과 투쟁, 한국을 지배했다는 역사의 자취는 현실의 大陸政策과 실로 잘 부합’되며, ‘참모본부가 최초로 비문연구에 손을 댄 것은 그것이 대륙정책의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¹⁰⁾는 것 등 참모본부의 군사작전의 일환으로서 학문적 영역과 뒤범벅이 된 채 연구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광개토대왕비문의 문제는 일본의 한국사연구열을 크게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였고, 그들의 한국사연구의 영역을 한국고대사에 치중케 하는 한편 일본의 南鮮經營說 및 任那日本府說을 정당화하도록 이끌었다. 또 고대한일관계의 연구가 일본의 고대사주류를 파악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당시 일본국사학계에 대해 광개토대왕비문연구로 자극된 그들의 한국고대사연구는 일본국사학의 전반적인 수준의 문제와도 직접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

〈學術誌 初期에 나타난 韓國史研究〉

광개토대왕비문이 연구되고 있는 시기에 일본의 역사학계는 근대적 학문에 접하고 있었다. 대

5) 佐伯有清, 《廣開土大王碑と參謀本部》(吉川弘文館, 1876). p.6.

6) 佐伯有清의 前掲書에 인용된 <官員錄>에 의하면, 酒匂景信은 砲兵科 將校로 1877(明治 10)년에 少尉, 1882(明治 15)년에 中尉, 1886(明治 19)년에 大尉로 진급하였고, 1880년에 參謀本部에 근무하기 시작, 그 이듬해부터 2년간 出仕했고, 1884년에 士官學校 教官으로 되었다. 그가 滿洲지역에 갔던 것은 1882년 3월부터 1884년 6월까지의 出仕期間에 해당될 것이다.

7) 이것은 碑 4면에 새겨진 1803字를, 1면 33枚, 2면 28枚, 3면 40枚, 4면 32枚의 종이로 나누어榻本한 것이다.

8) 佐伯有清의 前掲書에 의하면, 橫井忠直은 1884(明治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日文으로 된 2종류의 <高句麗古碑>를 썼고, 1888(明治 21)년 10월에 漢文으로 된 3종류의 <高句麗古碑考> 혹은 <高麗古碑考>를 찬술하였다고 하며(p.47), 이 古碑考들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다.

9) 광개토대왕비문 해석에 따른 당시 일본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해서는 李萬烈, 《淸日戰爭과 韓日關係》-日本の對韓政策形成에 關한 研究-(一潮閣, 1985) pp.86~87 참조

10) 旗田 巍, 前掲書, p.166.

학에서는 史學科의 創設에 이어 史學會가 조직, 《史學會雜誌》(뒷날《史學雜誌》)를 간행했고, 출판계에서는 史學關係 잡지들이 간행되었다.¹¹⁾ 이 밖에 學習院의 《輔仁會雜誌》를 비롯하여 대학에서 발간하는 각종잡지가 있었고 전국적인 것으로 《考古學雜誌》¹²⁾ 등이 있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이런 잡지들의 간행동기라 하겠는데, 예컨대 《歷史地理》의 간행동기에서 한국 침략의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帝國大學 교수였고, 당시 일본 國史學界의 중진이었던 문학박사 星野恒이 <<歷史地理>發刊에 붙여>라는 글의 말미에 쓴 구절이다.

豊公의 朝鮮을 征伐함에 그 地圖를 製하고, 八道를 色別하고 이를 諸將에게 주고, 옛 英雄이 일을 함에 우선 지리를 詳細히 하고 그런 후에 손을 써야 成功이 있다. 史를 읽는 자도 이 뜻을 體得하고 每事 地理를 照考하고, 仔細히 연구하면 當日의 情勢 반드시 躍躍계 하여 眼前에 있는 것과 같이 된다. 이것이 日本歷史地理研究會의 設立하는 所以이다.¹³⁾

이 글의 필자 星野는, 江戸時代 이후에 국학적 전통을 이어받았던 국사학자로서, 그가 重野安禪 久米邦武와 같이 저술했던 《國史眼》이 日鮮同祖論의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추구했던 점에서, 일본의 건국신화나 전승에 나타난 한일관계 해석에도 국학자의 견해를 계승했던 인물로 지적된다.¹⁴⁾ 그렇다면 그가 간단하게 든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歷史地理》의 간행에서 보여지는 學問的 동기의 일단은, 그것을 한국과의 관계에로만 좁혀서 본다면, 한국 진출 내지는 침략적 저의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9세기 말 일본의 근대역사학의 업적을 반영하고 근대역사운동에 앞장선 학술지는 1889년에 간행된 《史學會雜誌》로서, 1892년에 《史學雜誌》로 개칭되었다. 여기에는 일반 史學理論과 東洋·西洋·日本史 등의 연구업적이 고루 소개되고 있었다. 1890년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사연구가 ‘근대학문의 방법’에 따라 나타날 수 있었다. 창간 후 1890년까지 조사 가능했던 한국 관련 논문들¹⁵⁾은 淸日戰爭을 전후한 시기의 日本의 한국사연구 상황과 그 성격

11) 1900년 전후에 일본에서 발간된 잡지들 중, 다음 몇 가지를 역사와 관계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江城日誌》 1868(慶應 4)년 5월刊/《人類學會雜誌》 1887(明治 20)년 刊(?)/《史學會雜誌》 1889(明治 22)년 刊/《舊事諮問錄》1891(明治 24)년 刊/《史學雜誌》 1892(明治 25)년《史學會雜誌》를 改稱함/《史談速記錄》 1893(明治 26)년 刊/《考古學會雜誌》 1896(明治 29)년 刊/《舊幕府》 1897(明治 30)년 刊/《歷史地理》 1899(明治 32)년 刊/《考古》 1900(明治 33)년 改稱(?)/《考古界》 1901(明治 34)년 改稱(?)

12) 《考古學雜誌》에 실린 한국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伊東忠太(工學生, 大學院生)-<法隆寺建築論> (1호~4호)/ 烏居龍藏-<遼東에서 발견된 獅子狩의 彫刻石>(4호)/ 福地復一口演, 岡田村雄 筆記-<日本에 遺存된 三韓의 佛像>(6호)/ 三宅米吉(《考古學會雜誌》 편집위원)-<高麗古碑考>(제2권 제1호~3호), <高麗古碑考追加>(同 2권 5호) 八木獎三郎(1900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고고학회 회원)-<韓國京城論>(《考古界》 제1권 1호), 韓國考古資料通信(同 1편 6호-恩津의 彌勒, 京城의 蠟石塔, 高麗朝의 陶銘, 大將劍) 및<韓國佛塔論>(同 1편 8~9호), 朝鮮考古談(同 1편 11호, 1902년 3월 23일자 <時事新報>에 게재된 古代의 遺跡과 遺物, 古代陶器의 鑒別을 抄錄·轉載)

13) 星野恒, <歷史地理發刊에 붙여>(《歷史地理》 제1권 제1호), p.2.

14) 旗田 巍, 前掲書, p.122.

15) 필자와 관련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菅政友: 三韓文學의 原始及歷史考>(14호, 1890), <古事記年紀考> (17호, 1890년), <高麗好太王碑銘考>(22~25호, 1890)/ 吉田東伍 :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21~22호, 1890)/ 坪井九馬三:<新羅高句麗百濟三國史 五十卷>(35호, 1891), <古朝鮮三國鼎立形勢考>(35~38호, 1891), <三韓>(5편5호, 1894)/ 星野恒:<七枝刀考>(37호, 1891)/ 嶋田重禮:<百濟所獻論語考>(6

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橫井의 <高句麗古碑考>를 채택·참고하여 발표했다는 <高麗好太王碑銘考>(22~25호, 1890)¹⁶⁾에서 菅政友는 碑文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해설한다. 특히 그는 비문 중의 <倭以辛卯年來渡海>를 풀이하면서, 倭의 존재를 王充의 論衡 儒增編(倭以貢鬯草)과, 漢書地理志(樂浪海中有倭人), 魏略(倭在帶方東南大海中)을 들어 논증하고, 辛卯年은 永樂元年(新羅 奈勿王 36년, 西紀 391년)이라고 하였다. 또 비문 중의 <破百殘□□新羅 以爲臣民>은, 앞에서 말한 辛卯年을 日本紀에 의해 人德天皇 79년으로 잡았지만 甲子二運의 차이를 감안, 應神紀3년, 壬辰조 “是歲 百濟辰斯王 失禮於貴國 天皇故遣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川宿禰 木菟宿禰 嘖讓其死禮狀 由是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王而歸”의 기사에 결부시켜 <破百殘>의 사실로 추정했던 것이다. 그는 또 <以爲臣民>의 句節에서, 臣은 百殘에, 民은 新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자료를 번잡하게 나열하는 식의 菅政友의 이 논문은 근대 역사학의 치밀한 實證方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한다. 근대사학적인 실증이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그들이 인용하고 있던 《古事記》와 《日本書紀》 및 중국의 고전과 史書들에 대한 史料批判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항이 제시되면 그 사항에 대한 傍證을 煩多하게 끌어대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史學雜誌 편집분류 항목 중 <考證>난에 編目되고 있음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史料批判이나 사료의 本文批判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廣開土大王碑文의 풀이는, 倭와 관련된 점에서는, 그들의 《日本書紀》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神功王후의 南鮮侵略과 任那日本府說을 더 확실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¹⁹⁾

吉田東伍의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는 그의 《日韓古史斷》에 앞서서 집필한 논문이다. 그는 일본사료의 素盞鳴尊이 <韓鄉之島 曾尸茂梨之處>에 강림했다는 기사에 유의하여 古代韓日

편1호, 1895)/ 林泰輔:<加羅의 起源>(25호, 1890), <加羅의 起源續考>(제5편3호, 1894), 坪井九馬三의 <古朝鮮三國鼎立形勢考>를 읽고(42호, 1893), <朝鮮史籍考>(7편1호, 3호 1896)/ 那珂通世: <高句麗古碑考>¹⁾(47, 49호 1893), <朝鮮古史考>(5편 3·4·5·6·9·10호, 6편 4·5·6·7·9·12호, 7편 1·3·5·6·8·10호 1894~1896)/ 白鳥庫吉:<朝鮮의 古傳說考>(5편12호, 1894), <朝鮮 古代諸國名稱考>(6편7~8호, 1895), <朝鮮古代地名考>(6편10·11호, 7편1호, 1895~1896), <朝鮮古代官名考>(7편4호, 1896), <朝鮮古代王號考>(7편2호, 1896), <日本書紀에 보이는 韓語의 解釋>(8편 4·6·7호, 1897), <吏道>(8편1호, 1897)

16) 《史學會雜誌》 25호(2편), P.50. 참고로 橫井氏와 그의 논문에 대해서는 佐伯有清 著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 1976, pp.47~102 참조. 佐伯氏에 의하면, 橫井氏는 1884년 7월~12월 間에 日文中으로 된 2종류의 <高句麗古碑考>를 1888년 10월에는 3종류의 <高句麗古碑考> 혹은 <高麗古碑考>를 썼고, 이 밖에도 <高句麗古碑釋文> <高句麗古碑文> <高句麗碑出土記> <高麗古碑本之由來> <高麗古碑本由來> <碑文之由來記>등을 썼다는 것이다.

17) 《史學會雜誌》 제22호, pp.37~39.

18) 예를들면, 碑文中의 “九年己亥 百殘違誓 合倭和通 王巡下平穰 …”의 기사와 관련, 이 논문에서는 平穰을 考證하면서 平穰은 곧 平壤이라는 데서 시작, 平壤의 역사적 고증을 위해 《史記》 朝鮮傳의 王儉城(正義 括地志의 註引用), 《漢書》의 臣瓚註, 《三國史記》高句麗 東川王 21年 春 2月條와 故國原王 4年 秋 8月條 및 《地理志》의 平壤城조, 《唐書》, 《太平寰宇記》, 《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을 인용하는 등, 平壤과 관련된 原資料의 인용만 1페이지가 넘는다.

19) 旗田 巍, 前掲書, p.164. “이전 단계에서는 일본인 연구자가 비문연구를 지배하여 비문을 ‘任那경영’의 유력한 논거로 마무리질 했다.”

關係의 밀접함을 인식하고 그 관계를 규명할 필요에서 이 논문을 起論한 듯하다.²⁰⁾ 그는 素盞鳴尊이 渡韓한 曾尸茂梨를 牛頭山에, 그 시기를 漢의 春秋戰國時代 즉 BC 4世紀로 보고, 당시의 한반도 諸國의 형세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朝鮮을 비롯해서 辰國(秦韓, 馬韓, 弁韓)·扶餘·高句麗·馬韓·弁韓(駕洛諸部)·鷄林 등 초기의 사회상태를 설명하고, 후편에서는 高句麗·百濟·新羅·任那에 관해 略述했다.²¹⁾ 이 논문은 뒷날 그의 《日韓古史斷》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

林泰輔의 <加羅의 起源>과 <加羅의 起源續考>는 이에 앞서 발표한 <朝鮮古代諸卵生の 傳說>²²⁾ 과 같이, 뒷날 白鳥庫吉이 학문적 비판을 가했던 논문이다. 이 중 <加羅의 起源續考>는 1892년에 발간된 그의 《朝鮮史》(<太古史>·<上古史>·<中古史>)를 집필할 때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듯하다. 즉 《朝鮮史》에서 이미 그는 金首露와 그 부인 許皇后가 印度人이라 하였고, 印度로부터 곧바로 바다를 건너 朝鮮南部에 왔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考證이 자못 煩雜하므로 장차 他日을 기다려 이를 詳論하겠다”고 했던 것이다.²³⁾

林泰輔는 <加羅의 起源>에서 佛書에 散見되는 비슷한 사실을 例로 들고 거기에서 起論하여, 《駕洛國記》에 실린 天竺阿踰陀國의 王女 許氏의 일을 근거로 해서, 加羅는 인도인이 개척한 것이라 논단했다.

<加羅의 起源續考>에서는, 朝鮮古代諸卵生の 傳說(그가 예로 든 것은 朴赫居世, 鄒牟王, 金首露 及 五伽耶王, 昔脫解의 전설 등이다)과 印度 古代의 傳說(그는《賢愚因緣經》, 《法苑珠林》, 《唐書南蠻傳》, 《大越史記全書》, 《山海經大荒南經》, 《大明一統志》, 《博物志》, 《後漢書》 등에 나타난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 張華의 《博物志》에 보이는 徐偃王傳說도 중국이 인도와의 交通에서 흘러온 것으로 이해한다)을 비교한 후 그 類似性을 들어, “古代에 印度人이 馬刺加 海峽을 넘어 東方에 交通하고 드디어 朝鮮半島의 南岸에서 加羅國을 열었다”²⁴⁾고 주장했다. 林泰輔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치 않다. 加羅의 開國을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그는 韓國史의 起源에서 이미 그 他律的 要因을 제기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은 《朝鮮史》의 다음의 구절에서도 풍기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駕洛地方은 즉 朝鮮南部의 開(地)인데, 일찍이 印度의 風化를 입었던 者이며, 高句麗地方은 즉 朝鮮北部의 偏(地)에서 支那文明의 餘光을 의뢰하는 자이다. … 此說은 前人의 아직 道破하지 못한 바이다.²⁵⁾

加羅가 인도인에 의해 開國되었다는 林泰輔의 주장은 그 뒤에 나타난 重厚한 考證學者 白鳥庫吉로부터 비판받았다.²⁶⁾ 白鳥는 林泰輔의 주장에 대해 “氏는 僧侶輩가 捏造했던 假作的 物語를 眞正의 口碑라고 誤認”했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이와 같은 예가 朝鮮國에 限하지 않고 蒙古의

20) 吉田東伍,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史學會雜誌》 21호), pp.21~22.

21) 吉田氏は 이때 이미 那珂, 橘, 阿部, 星野, 久米 등의 이 방면의 논문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22) 《人類學會雜誌》 8권 85호-白鳥庫吉, <朝鮮의 古傳說考>(《史學雜誌》 5편 12호), p.14참조.

23) 林泰輔, 《朝鮮史》 권2 제3편 제6장, pp.24~25.

24) 林泰輔, <加羅의 起源續考>(《史學雜誌》 5편 3호), p.68.

25) 林泰輔, 《朝鮮史》 권2 제3편, pp.24~25.

26) 那珂通世도 <朝鮮古史考> 중의 加羅考(《史學雜誌》 7편 5호), pp.39~40에서 白鳥의 이 비판을 인용하면서 白鳥를 지지하고 있다.

古傳說에도 같은 것이 보이는데, 林泰輔의 논리대로 한다면 蒙古도 인도인이 개척했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²⁷⁾

那珂通世의 <高句麗古碑考>²⁸⁾는 橫井忠直이 1889년 《會餘錄》5집에 수록한 논문과 그의 일련의 이 방면의 글들, 1891년 菅政友의 <高麗好太王碑銘考>에 이어서 나타난 廣開土大王碑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會餘錄》5집의 橫井의 <高句麗古碑考>를 全文 인용하여 그 碑의 出土 經위에 대해 언급한 후, 橫井忠直 重野安繹 菅政友 등의 說을 참고하여 碑의 本문을 고증하였다. 그는 碑文을 3段으로 나눈다. 제1段에서는 朱蒙에서부터 廣開土王에 이르기까지의 17世系에 대하여, 제 2段은 廣開土大王의 外征과 관련하여, 第3段은 守墓人烟戶와 관련하여 고증했다. 어쨌든 那珂의 그 번쇄한 고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의 하나는, 이 廣開土大王碑文이 古代 日本의 南鮮經營說이나 任那日本府說을 합리화하는 데 援用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점은 당시의 일본의 歷史學者로서 廣開土大王碑文연구에 나섰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거의 공통된 자세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된다.

那珂通世의 야심적인 업적은 그의 <朝鮮古史考>라는 논문이다. 무려 2년여에 걸쳐 《史學雜誌》에 18회나 연재된, 그래서 단편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著書의 성격을 가졌다고 해야 할 이 논문의 내용은 9章으로 나누어진 목차²⁹⁾가 잘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제1장 <朝鮮古史史籍考>에서 이 논문에 인용된 韓·中·日의 韓國古代史關係 자료를 소개하고 아울러 史料批判도 곁하고 있다는 점이다. 史料 중 《東史寶鑑》같은 것은 생소하지만,³⁰⁾ 고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측 사료를 중시하고 있으며,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한국측 자료보다는 중국측의 東夷傳類의 기록을 신뢰하고 있다. 또 그는 이 글에서 吉田東伍, 菅政友, 林泰輔, 白鳥庫吉 및 아스톤 같은 분들의 근대적 업적들을 자주 援用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취급범위가 광범하고 대부분 번쇄하고도 術學的인 고증에 치우쳐 있어서 그 各論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논문의 이곳저곳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卓見과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이 무렵 《史學雜誌》등의 학술지를 통해 가장 왕성한 연구활동을 벌이며,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白鳥庫吉이었다. 그는 <朝鮮의 古傳說考>에서, 그전에 이미 學習院 《輔仁會雜誌》에 게재한 바 있는 <檀君考>를 먼저 요약하고, 檀君問題를 “僧徒의 妄說을 歷史上的 事實로 삼았던” 것이라고 주장한 那珂通世의 주장을 지지하면서,³¹⁾ 檀君傳說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 고증을 기하고 檀君을 高句麗의 祖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그는 또 林泰輔의 韓國古傳說 理解를 비판하면서,³³⁾ “氏는 僧侶輩가 捏造했던 假作的 物語眞正的의 口碑라고 誤解했다”고 지적하고, 林泰輔의 韓國古傳說 사례에다 2개의 전설을 추가하는 한편 朝鮮의 기록 중 卵生傳說의 가장 오래된 것은 好太王의 碑文이며, 조선의 전설이 佛教(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³⁴⁾

27) 白鳥庫吉, <朝鮮의 古傳說考>(《史學雜誌》 5편 12호), pp.15~16.

28) 《歷史雜誌》 제48호, pp.26~40에도 <高句麗古碑考>라는 那珂의 논문이 있으나 그 내용은 同47호의 것을 중복 수록한 것이다.

29) 那珂通世의 <朝鮮古史考>의 目次는 다음과 같다. 1. 朝鮮古史史籍考, 2. 朝鮮樂浪玄菟帶方考, 3. 貂人考, 4. 高句麗考, 5. 三韓考, 6. 百濟考, 7. 新羅考, 8. 加羅考, 9. 三國文化考.

30) 那珂通世, <朝鮮古史考>(《史學雜誌》 5편 10호), pp.24~25.

31) 《史學雜誌》 5편 12호, p.11. 註 45)참조.

32) 白鳥庫吉, <朝鮮의 古傳說考>(《史學雜誌》 5편 12호), pp.11~14.

33) 註41), 42) 참조.

白鳥庫吉의 논문들은 제목 그대로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國名 地名 官名 王號 및 述語를 韓·中·日의 史料에서 발췌하여 考證한 것이다.³⁵⁾ 白鳥庫吉의 朝鮮古代의 國名·地名·官名·王號 등의 연구는 그의 고증적 태도를 잘 보여준 것이다. 그의 고증은 그 전의 학자들이 가졌던 煩瑣·術學的인 자세를 극복하고, 오히려 간결하면서도 치밀하며, 비록 그 고증의 대상이 주로 지명·관명 등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古代社會의 性格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의 고증에서 언어학적 방법이 구사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日本書紀에 보이는 韓語의 解釋>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언어학적 방법론은 그 뒤의 일본의 한국고대사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전후의 한국인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韓語의 解釋>의 경우, 일본의 古代史 형성에 한국의 언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하여튼 白鳥庫吉의 考證學은 그 고증한 개별적 史實이 오늘의 史學 水準에서 수궁할 수 없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고증방법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그 뒤의 考證史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 열거된 논문들을 볼 때, 《史學雜誌》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된 이 時代의 한국사관계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첫째 三韓·三國 등 古代史研究에 국한되어 있고, 둘째 文獻考證에 치중해 있으며, 셋째 白鳥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이 言語研究가 歷史研究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菅政友·那珂通世 등이 廣開土大王碑文研究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史學雜誌》라고 하는 당시 최고수준의 學術專門誌에 근대적 방법론을 구사하여 연구된 논문들에서, 古代日本의 조선에 대한 진출설이 이렇다할 合理的인 論證이 없이 발표되고 그것이 定說인 양 後學들에게 引用되고 있다는 점과, 또 韓國史의 他律性論의 機微가 이들 논문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근대적인 考證史學을 통해 나타났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單行本 史書에 보이는 韓國史研究〉

清日戰爭을 전후한 시기에 日本에서 발간된 韓國 관련 책자들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³⁶⁾ 19

34) 白鳥庫吉, <朝鮮의 古傳說考>(《史學雜誌》 5권 12호), pp.14~21.

35) 그가 쓴 논문에서 취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鮮古代諸國名稱考>(朝鮮, 新羅, 鷄林, 加羅·任那, 百濟, 高句麗), <朝鮮古代地名考>(國內城, 溟水, 鴨綠江, 庵利大水, 阿利那禮, 橐離國, 五谷城, 蓋馬大山, 阿斯達山, 單單大嶺, 太白山), <朝鮮古代官名考>(韃吉支, 吉士·吉師, 干錦今, 波沙寂錦, 加·古雛加, 高句麗侯 驪, 兄, 迦美), <朝鮮古代王號考>(居西干, 韃吉之·旱岐, 尼師今, 麻立干, 汗·可汗). 참고로 <朝鮮古代王號考>의 끝 부분에서 그는 앞의 <朝鮮古代諸國名稱考>와 <朝鮮古代地名考>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가하였다. 徐羅伐, 金城, 回回人의 <シラ>鳴, 東盟(Tangmei), <アムール>(大水)·ウミ(海), <日本書紀에 보이는 韓語의 解釋>[曾戶茂梨, 河山(ナレムレ), 主島(ニリムセマ), 俱知(クチ), 上哆喇(オコシタリ)·下哆喇(アルシタリ), 帶山城(シトロムレサシ), 質(ムカハリ), 靺皮(ニヒリ), 母(オモ), 王(オラカ)·妃(オリタ)·夫人(ハシカシ)·女郎(エハシ)·子(トモ)]

36) 이런 책들에 대해 旗田巍 교수가 든 것은 江戸時代 林子平: 《三國通覽圖說》(1785)과 明治 초기 田口卯吉: 《日本開化小史》(1877~1882, 6冊), 重野安釋·久米邦武·星野恒 共著: 《日本史略》(1877년

세기 말의 일본의 韓國史研究를 엄밀히 고찰하자면 이들 冊子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이 중에서 일본정부의 官撰書, 개인이 쓴 韓國專門史書, 日韓關係史를 다룬 史書 등 몇 개만 검토의 대상으로 하겠다.

《外交志稿》는 1877년 外務大書記官 記録局長 渡邊洪基가 外務卿 寺島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등에게 建議하여 기록국에서 편찬한 外交史 관계 책자로서, 8부문의 編門과 5地域의 外交相對로 분류되어 있는데³⁷⁾ 朝鮮에 관한 경우는 新羅·百濟·高句麗·任那·耽羅에서부터 시작하여 高麗·朝鮮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책은 1877년부터 편수작업이 시작되어 첫 해에 重野·久米·星野교수에 의해 《日本史略》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明治維新 이후 漸增하고 있던 中央集權의近代國家意識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국가적 위치를 史的으로 究明해 보려는 의도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 책은 8개의 編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交聘篇의 朝鮮편(pp.1~66)에서는 古代의 조선과의 交聘關係를 《日本書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 기술하고 있다. “神武天皇紀元 628年 崇神天皇65年 戊子 7月 任那國使者 蘇那葛叱智 등을 파견하여 朝鮮이 我國에 通交하기 始作하다”³⁸⁾라든지, “紀元 860年 仲哀天皇 9年 庚申(新羅王 昔脫解 5년) 神功皇后가 新羅를 征服하다”³⁹⁾라는 文句가 이 책자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交聘篇末에 해당되는 近世朝鮮 후기 부문에서 그들은 조선의 饑民을 援조하기 위해 米와 金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여 사실을 捏造한 부분도 눈에 뜨인다.⁴⁰⁾

戰爭篇의 朝鮮편(pp.171~250) 序頭에 “朝鮮은 我에 있어서 一葦로서 航海 가능한 땅으로 事端交涉이 특히 많았고, 더욱이 오래 전에 또한 뚜렷한 것은 神武天皇 紀元 860年 仲哀天皇 9年 庚辰-新羅王 昔奈解 5年, 高句麗王 山上 3年, 百濟王 肖古 35年-에 神功皇后가 三韓을 征伐한 것이 이것이다”⁴¹⁾라고 하면서 《日本書紀》에 따라 三韓征伐에 따른 준비와 경과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뒤이어 任那의 國司 또는 任那府가 언급되고 있다.⁴²⁾ 그들의 소위 雄略大皇 8년 甲辰(高

初刊, 뒷날 《國史眼》이라 改名하고 1888년에 完成하여 1890년과 1901년에 출판함), 林泰輔: 《朝鮮史》(1892), 吉田東伍: 《日韓古史斷》(1893) 정도를 들고 있다. 거기에 비해 幣原坦은 關根錄三郎이 訓點을 찍은 朝鮮國志 2冊 (1883), 外務省 記録局: 外交志稿 1冊 (1884), 木下眞弘: 豊太閤征外新史 5冊 (1893), 北豊山人: 文錄·慶長 朝鮮役 1冊 (1894), 服部撤: 日韓交通史 1冊 (1894), 西村豊: 朝鮮史綱 2冊 (1895), 大槻修: 東洋分國史 朝鮮之邦 1冊 合本 (1896), 菊池謙讓: 朝鮮王國 1冊 (1896),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1冊 (1901) 등 9권의 冊子들을 거론한 바가 있다(幣原坦, <朝鮮近世史略評> 《史學雜誌》 12권 10호, pp.57~66) 이 밖에도 廣開土大王碑文과 관련하여 山田安榮: 《靖方溯源》(1891), 參謀本部 編纂課: 《征西戰記稿》(1885)와 幣原坦이 1901년에 《史學雜誌》에 그 略評을 가한 바 있는 林泰輔의 《朝鮮近世史》를 들 수 있다.

37) 《外交志稿》, 緒言 및 凡例 참조. 8編門은 交聘·戰爭·版圖沿革·漂流·歸化·移住·學術宗教·贈酬貿易이고, 5地域(國)은 朝鮮·漢土·肅慎渤海·西南諸國·歐羅巴及亞米利加 등이다.

38) 《外交志稿》, p.1.

39) 《外交志稿》, p.2.

40) 예를 들면, 그들의 光格天皇 文化12 (1815)년 乙亥秋에 “朝鮮이 饑饉이 들자 幕府는 對馬島 守宗義質을 시켜 米一萬石을 輸送하고 그 이듬해 丙子秋에 또 一萬石을 수송하여 이를 賑恤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近世日本外史>를 들었다. 또 仁孝大皇 天保 5년(1834)甲午에 朝鮮王居에 災難이 있었는데 12월 幕府에서 金 一萬兩을 發하여 이를 賑恤했다고 써 놓은 것 등이다.-《外交志稿》, p.66

41) 《外交志稿》, p.171.

句麗 長壽王(52년)에는 “高句麗가 大兵을 일으켜 新羅를 쳐서, 新羅가 구원을 任那에 乞하매 行軍元帥 膳斑鳩가 가서 이를 구하고 高句麗軍을 破하다”⁴³⁾라고도 썼다. 世宗 元年(1419) 6월 李從茂가 戰艦 500艘를 이끌고 對馬島를 征討하였으나 오히려 패배하여 2,500人이나 戰死하였으며, 8월에 다시 征伐하였으나 李從茂 등이 겨우 살아왔다고도 썼다.⁴⁴⁾ 壬辰倭亂에 대하여도 20여 페이지 이상 서술하였는데, 내용은 그들 침략군의 활약상과 明軍과의 對決·和議가 중심이 되어 있고, 朝鮮軍에 대해서는 李舜臣의 활약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⁴⁵⁾ 義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官撰의 성격을 띤 《外交志稿》는 明治初期에 國家意識을 高揚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대외관계에서 일본에 유리한 측면을 강조했다. 政府主導의 대외관계 서술에서 任那日本府說이나 南鮮經營說, 그리고 그 뒤의 한국과의 諸戰爭에서의 勝利 등을 과시한다는 것은, 弱小國을 犧牲羊으로 만듦으로써 國民의 統合力을 유도했던 근대 서구국가의 侵略主義的 國家意識形成과 다를 바가 없었다.

《朝鮮史》(1892)는 林泰輔⁴⁶⁾가 쓴 것으로 近代學問에 접한 史學家가 近代的인 서술방법에 입각하여 서술한 최초의 朝鮮歷史 專門書라고 할 수 있다. 그가 《朝鮮史》를 저술한 동기는, 무엇보다도 “朝鮮이 가장 가까운 蕞爾小邦으로서 東洋의 咽喉에 居하기 때문에 強大國의 必爭之衝이 되었는데, 日本과는 一衣帶水의 나라로 그 安危存亡이 실상은 唇齒와 같은 관계인지라, 하루아침에 變亂이 있기만 하면 日本으로서도 결코 坐視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晏然無事로록 된다면 通商의 利益이 오히려 日進의 勢에 있으니, 진실로 今日의 有用한 학문과 일에 竭力하려 한다는 것은, 그 역사를 모르고서 어찌 可하겠는가”라고 한 그의 吐露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朝鮮史》를 집필하려는 그의 솔직한 의도이자, 당시 일본의 知識人, 나아가서는 일본 국민과 정부의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林泰輔의 《朝鮮史》서술은 淸日戰爭 직전의 일본의 韓半島·大陸 進出의 시기에 그들의 국가적인 현실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林泰輔는 이 책 저술 전의 업적에서 韓國史研究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나 그는 古典에 능통한 사람이다. 일본의 古典은 물론 중국의 經史와 한국의 漢籍史書 등에도 博通한 林泰輔

42) 《外交志稿》, pp.178~179.

43) 《外交志稿》, p.179. 이 책자가 참고한 《東國通鑑》에는 長壽王 51년에 해당하는, 新羅 慈悲王 6年條의 《三國史記》의 <新羅本紀>기사만 轉載해 놓고 있다.

44) 《外交志稿》, p.221.

45) 《外交志稿》, pp.228~250. 李舜臣과 관련, 이 책자에서는 日本軍의 전반적인 戰略이 失敗하게 되는 중요한 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놓고 있다. “小西行長이 平壤에 이르러 다음날에 그들의 舟師의 來습을 기다렸다. 이에 앞서 水軍의 大將 九鬼嘉隆 등이 陸軍을 만나려고 全羅海로부터 黃海道로 진출할 때에 全羅水軍節度使 李舜臣이 閑山島를 근거로 용감하게 善戰하여 敵軍을 누차 격파하였다. 來島康親은 戰死하고 脇坂安治는 苦戰, 士卒을 많이 상실하여 單舸로 간신히 죽음을 免하고 我水陸의 軍이 서로 離隔하였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日本海軍이 南海에서 李舜臣에게 격멸된 것은, 陸軍에게 補給·兵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朝鮮에서의 陸海共同作戰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따라서 海路를 통한 補給이 끊어진 陸軍의 小西行長 등은 後退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46) 저자 林泰輔는 東京大學의 前身인 帝國大學의 古典科에서 授業을 받아 中國의 經史에도 博通하였으며 《朝鮮史》 저술 당시 山口高等中學 助敎로 있었다. - 小田剛, 《朝鮮史》序, <山口高等中學助敎 林君浩卿 嘗受業於大學古典科 博涉經史 頗精考據 今者著朝鮮史五卷>

가 그의 능통한 漢學 실력을 구사하여 한국 史書를 廣涉하고, 일직이 수련받은 바 있는 洋體式의 소위 근대적 歷史敍述形式으로 한국사를 再構成·編纂하는 작업을 벌여 이룩한 것이 바로 이 《朝鮮史》라 할 수 있다. 그가 凡例에서 “上古史는 先君의 薨年으로써 嗣王의 元年으로 하고, 中古史 以下는 先君薨年의 이듬해를 嗣王의 元年으로 하고, 모두 舊史에 따르고 고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三國史記》의 踰月稱元法과 《高麗史》의 踰年稱元法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舊史란 《三國史記》와 《高麗史》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는 결국 《三國史記》와 《高麗史》 등의 舊史에 입각하여 《朝鮮史》를 편찬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⁷⁾

《朝鮮史》는 4기로 나누어, 漢郡縣 이전을 太古로, 三國鼎立부터 新羅 敬順王(992년간)까지를 上古로, 高麗太祖로부터 恭讓王까지(446년간)를 中古로, 朝鮮太祖로부터 약 500년간을 近世로 해서 서술하겠다고 했다.⁴⁸⁾ 그러나 근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뒷날 따로 朝鮮近世史라는 제목으로 1900년에 출판하였다.⁴⁹⁾ 《朝鮮史》는 時代區分 못지 않게 내용면에서 制度·社會·經濟·文化·風俗 등을 할애했는데 이는 종전까지의 政治史 중심의 역사서술을 일단은 止揚하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第3篇의 12장~15장까지의 목차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표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도 기할 수 있었다.⁵⁰⁾ 그런 점에서도 林泰輔의 《朝鮮史》는 전근대적인 역사서술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근대적인 敍述體制와 敍述方法에다 社會經濟·文化風俗 등의 확대된 역사인식 그리고 視覺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諸表 등을 통해서 볼 때, 《朝鮮史》는 당시로서는 한국사 서술에 새로운 里程碑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으며, 뒷날 玄采 등 한국의 啓蒙期의 史家들이 《朝鮮史》를 변안하는 등 林泰輔의 역사서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그것은 이 책자가 일본과 한국에서 근대적 서술체계에 입각하여 서술된 최초의 專門書라는 점과, 그 점 때문에 이 책자가 뒷날 이 방면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책의 문제점은 특별히 韓國古代史 인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서술의 주체가 日本(人)이며 日本紀元을 표준으로 하여 서술되었다. 《朝鮮史》를 서술한 것임에도 이 책자 중의 ‘我’는 일본을 가리키고, 또 史料取扱에서도 韓國側 史書보다는 中國과 일본의 것을 더 신빙하여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檀君문제인데, 檀君에 관한 說은 荒唐하여 믿기 어렵다고 하고⁵¹⁾ 日本史에 牽強하여 설명하였다.⁵²⁾ 셋째, 조선은

47) 그 뒤에 출간된 《朝鮮近世史》도 《燃藜室記述》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그의 著述은 分析的인 研究結果라기보다는 《三國史記》와 같은 한국측 史書를 洋體式으로 再構成하는 데서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남달리 많은 자료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48) 林泰輔, 《朝鮮史》 凡例.

49) 1892(明治 25)년에 東京 吉川半七藏에서 출판한 《朝鮮史》는, 그 책의 序와 凡例에 4기로 나누어 출판하겠다는 내용과는 달리, 太古史·上古史·中古史 부분만으로 출판되었다. 그가 1900(明治 33)년에 《朝鮮近世史》를 따로 출판한 것을 보면 이 때(1892)에 近世에 해당되는 부분은 合刊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朝鮮近世史》(1900)의 例言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892년판 《朝鮮史》의 裏面의 內表紙에는 朝鮮史라는 題目 밑에 太古史·上古史·中古史라고만 쓰여져 있다.

50) 《朝鮮史》의 목차 및 각종 표에 대해서는, 李萬烈, <19世紀末 日本의 韓國史研究>(韓國史研究會編,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一潮閣, 1985) pp.112~114 참조.

51) 上揭書, 제1편, p.19.

52) 上揭書, 제1편, p.20. “故로 或人曰 桓은 神이고 桓因은 神 伊弉諾의 略이며, 桓雄은 神 須佐之男의

開國初부터 중국을 비롯한 일본·인도 등의 지배를 받았으며, 정치·군사적인 지배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지배도 포함시켰다.

중국과의 관계를 概略하면서, 朝鮮은 거의 支那의 屬國된 것과 같다⁵³⁾고 지적하고 근세의 開港 후에도 獨立國의 名位를 가지고 있지만, 그 實은 支那의 羈制를 받음이 前日보다 심하다고 썼다.⁵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素盞鳴尊과 稻水命의 來韓 등을 들어 太古時代 倭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⁵⁵⁾ 日鮮同祖論的 發想을 나타냈다. 그의 韓日上古史의 인식은 이렇게 《日本書紀》의 기본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書紀가 제기한 문제를 소위 근대의 考證學的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또 그는 伽倻가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⁵⁶⁾

넷째 고대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朝鮮지배를 전문적인 사서로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① 伽倻문제와 관련, 소위 任那日本府를 거론하고, ② 소위 神功王后의 정벌과 그 후의 新羅·百濟 등의 倭에 대한 服屬關係를 강조하며, ③ 三國의 일본에 대한 文化傳播를 文化的 朝貢 또는 獻納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⁷⁾

결국 林泰輔의 《朝鮮史》에 나타난 역사서술은 소위 近代的 學問의 방법으로 日本書紀類의 誤謬의 是正에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正當視함으로써, 그 뒤의 일본의 침략적 조선진출을 합리화하는 歷史的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다.

《日韓古史斷》⁵⁸⁾은 한반도와 일본이 言語·假字·體相·風儀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同種임을 인식하고, 離立되어 있는 ‘日韓이 同質의 種國’임을 밝히기 위해 시도된 저술이다. ‘日韓이 同質의 種國’이라는 표현은, 결국 뒷날 學界에서는 日韓同種論, 日鮮同祖論, 日韓一域論 등으로 정리된다. 神代로부터 시작하여 百濟·高句麗가 멸망하는 7세기 中葉까지를 다루는 이 책에서, 吉田東伍가 가장 관심을 나타낸 분야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그의 또 하나의 관심은 神代로부터 古代의 歷史時代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진출 내지는 그것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神代の 오랜 옛날부터 朝鮮은 日本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4세기 무렵부터는 神功王后의 소위 朝鮮征伐로 南鮮을 경영하고 任那日本府를 설치하여 근대의 總

略이며 ‘市在世里’의 市在는 須佐 즉 須佐之男이다. 檀君은 太祈(タキ)이고 素盞鳴尊의 子 五十猛神이다. 대개 素盞鳴尊은 그 子 五十猛神을 거느리고 新羅國에 도착, 曾尸茂梨에 居했다는 것이 我國史에 보인다. 또 五十猛神은 一名 韓神이라고 불려졌다면 事實 대략 符合되는데, 此說 역시 牽強에 가깝다. 단지 附해서 參考에 供한다”

53) 上揭書, 제1편, p.6.

54) 上揭書, 제1편, p.7.

55) 上揭書, 제1편, p.32.

56) 註39), 40) 참조.

57) ‘三國의 일본에 대한 文化傳播를 文化的 朝貢 또는 獻納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阿花王 때에 百濟의 博士를 ‘我邦’에 ‘貢’했다고 썼고, 聖王은 또 釋迦佛金銅像幡蓋經論을 일본에 ‘獻’했으며, 그밖에도 佛像 및 鑪盤工·佛工·寺工 등을 ‘我邦’에 ‘貢’했다고 기술했다(上揭書, 제2권 3편, pp.55~56). 이것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君臣관계에 놓고 그 文化傳播를 貢納 혹은 獻納의 형태로 인식하려 했던 것이다.

58) 吉田東伍는 辛卯(1891)년에 北海島에 流寓하면서, “肅愼의 氷雪을 밟고 혹은 樂浪의 雲濤를 破한” 鉞國守 阿部比羅夫의 傳記를 읽고 거기에 자극받아 1891년 8·9월호 《史學會雜誌》(21·22호)에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를 발표하고, 이어 東京에 돌아와 1년여의 노력 끝에 1893년에 이 책을 펴냈다.

督政治 같은 것을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日鮮同種論’과 ‘古代日本の 南鮮經營說’을 체계적으로 조합해 보려는 최초의 史書라고 할 수 있다.⁵⁹⁾ 그리고 이 책이 일본의 大陸侵略을 최초로 露骨化했던 淸日戰爭 1년 전에 발간되었다는 것도 주목을 끌게 한다.

《日韓古史斷》은 일본의 皇室紀年을 중심으로 하여, 時期를 太古紀(선대~A.D.198), 上古紀上(B.C.109~A.D.106), 上古紀下(107~302), 近上古上紀(303~517), 近上古下紀(518~668)로 구분하여 編名을 정하고, 各編마다 年表를 먼저 제시하고, 그 연대에 해당되는 歷史를 筑紫·韓半島·諸國의 순서로 설명한 것이다. 各編의 序章格인 年表에서는 年代表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 각 편에서 설정한 시기의 韓·日의 史實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구조에서 설명한다. ‘筑紫’에서는 당시 일본의 역사적 상황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韓半島와 滿洲의, 朝鮮·高句麗·扶餘·新羅·百濟·任那와 때로는 鮮卑까지도 포함시켜 그 歷史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한 이들 나라들의 서로간의 관계도 기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대 일본의 筑紫國을 중심으로 그 ‘同種’이며 ‘少弟’이기도 하다는 이들 韓·滿의 제국들을 한 歷史의 체계로 묶어 보려는 구상을 펼쳐 보이는 셈이다.

吉田東伍는 太古紀에서 노린 것이 일본과 한국이 同種임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古代神(人)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것을 논증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素盞鳴尊과 天日槍 說話 및 脫解가 筑紫 多婆那人이라는 것을 들었다.⁶⁰⁾ 또 上古紀上下에서는 筑紫와 任那問題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일본의 半島進出의 거점으로서의 任那官家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任那官家에 관해서 《日韓古史斷》은 제3편 제3장의 제 2절 任那에서 다소 장황하게 써 놓았다.

大伽倻가 本朝에 歸屬해서 任那의 稱號를 下賜받은 것이나 官家(ミヤケ)로 된 것은, 垂仁帝의 元年(漢獻帝 建安 4年, 新羅 奈解 4年)이다. 처음에 大伽倻 東北에 上中下の 三巴(기?)紋의 땅이 있었는데, 方 三百里이고 人民이 富饒했다. 大伽倻가 이를 (두고) 新羅와 싸워 民生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 여기에 王子 于斯岐가 東航하여 爭地를 獻하고 援助를 本朝에 請하다. 앞서 穴門에 이르러 뜻을 얻지 못하고, 越國에 들어가 氣比浦(敦賀)에 泊하다. 崇神帝가 어찌다가 돌아가고 垂仁 새로이 서서 그의 請을 聽許하고(姓氏錄云 請將軍 令治三巴汶地 卽爲貴國之郡也 天皇大悅卽是也) 鹽乘彦을 宰(伽倻俗曰 吉)로 삼고 가서 鎮定시키고, 先帝의 諱(彌摩岐)를 下賜하고 明代의 官家로 하니(彌摩岐의 御名의 彌摩那로 移한 것은 彌摩岐名의 略인가) 그러므로 彌摩那라고 稱했는데, 그 任那是 轉聲이라고 한다.⁶¹⁾

吉田은 물론 按說을 통해, 任那官家에 관한 贊反說을 소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白石史論>을 인용한⁶²⁾ 부분인데, 新井白石 때만 하더라도 ‘史無明文 今不可考’라고 한 소위 任那日本府 建治沿革이 뒷날 吉田을 비롯한 학자들이 기를 쓰고 확정하게 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韓日關係

59) 1977년 釜山房에서 이 책을 再刊하면서 이 책의 構造를 “專皇化遙被의 跡을 採해서 西北海表의 地理를 究하고, 또 外朝交涉의 由를 推해서 國家歷史의 紀年을 구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60)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pp.26~32. p.40, p.126.

61) 上掲書. pp.280~281.

62) “日本府建治沿革 史無明文 今不可考, <私記>引<草本日本紀>曰日本府舊作倭宰 <日本紀註>云 凡王人奉命 爲使三韓者 自稱曰宰 言其宰于韓 如今言使也 又彼稱宰曰吉(ヨシ)是崇神之末年也 其治謂之府 其官謂之宰 猶後之筑紫大宰府帥<魏志>云 置一大率 檢察諸國是也”-上掲書, p.282

의 진전 내지는 일본의 韓國進出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近上古上下紀에서는 神功王후의 新羅侵入과 그 후의 일본의 南鮮經營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분류해서 요약하면, 神功후의 침략과 再侵, 結婚, 納貢과 奉表, 半島에서 활동한 倭의 상황, 廣開土大王과의 관계 및 任那恢復을 위한 일본의 援軍 등에 관한 것이다.

吉田은 《日本書紀》 등에 나타난 그 뒤의 일본의 新羅再侵 기사를 거의 비판 없이 썼다. 己巳年에 荒田別 鹿我別이 新羅를 쳐서 7國을 任那에 귀속시켰고,⁶³⁾ 韓史의 妄誕을 책망하며 《國史》와 《宋書》 등에 의해 雄略帝의 韓人綏腹을 역설하며,⁶⁴⁾ 앞에서 말한 荒田別·鹿我別의 활동을 부연, 그들은 百濟將軍 木羅斤資와 함께 신라를 치고, 比自炆·南加羅·喙·安羅·多羅·卓淳·加羅의 7國을 平定시켜 任那府에 예속시켰다는 것이다.⁶⁵⁾

그 후 신라는 倭의 요구에 의해 여자를 納貢하여 倭王의 後宮으로 삼도록 했고,⁶⁶⁾ 백제의 近肖古王은 阿直岐와 王仁을 ‘本朝’에 ‘貢’하고 ‘獻’했으며,⁶⁷⁾ 백제의 武寧王은 ‘本朝’에 ‘奉表’하여 任那의 上·下哆利와 婆陀, 牟婁 등 4縣의 땅을 請했으며,⁶⁸⁾ 任那王 己能末多 干岐가 東航, ‘詣朝’하여 天皇에게 ‘奏’했고,⁶⁹⁾ 任那干岐도 ‘本朝’에 ‘奏’했다는 것이다.⁷⁰⁾

神功후의 소위 신라정복, 그 후의 수차에 걸친 南鮮 出兵과 함께, 《日韓古史斷》에서는 倭가 韓半島에서 활동한 상황을 任那와 百濟를 중심으로 써 놓았다.⁷¹⁾ 이에 비해 倭와 高句麗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못 조심스럽다. 고구려와 倭의 관계는 廣開土大王 때 외에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吉田은 廣開土大王碑文을 《三國史記》 등의 기록과 비교하며, 高句麗·倭의 관계를 일본에 內屬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나, 신라·백제와 같은 同種이며 屬邦에 接壤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外蕃됨을 말하고 있다.⁷²⁾

吉田에 의하면, 일본은 뒷날 任那가 신라의 위협을 받게 되자 529년경에는 近江毛野를 安羅에 파견, 任那官家를 再建하려고도 했고,⁷³⁾ 550년(庚午歲)에는 일본과 신라·임나의 數萬의 兵을 합하여 “고구려를 伐하고 道隆城을 빼고 나아가 平壤을 공격하여 6郡의 故地를 회복하려 했다”는 것이다.⁷⁴⁾

이렇게 볼 때, 《日韓古史斷》의 저술 의도는 4세기~7세기에 ‘한 반도에서 활동한’ 倭의 활약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다. 吉田은 《日本書紀》 등에 나타난 日鮮同祖論的인 發想은 물론 任那官家說과 고대 일본의 南朝鮮侵略·支配說을 近代의인 歷史學의 방법과 서술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술하려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자는, 淸日戰爭 전의 일본의 歷史學界가 廣開土大王의 발견 이후 精力的

63) 上掲書, p.359.
 64) 上掲書, p.370.
 65) 上掲書, pp.383~390.
 66) 上掲書, p.357.
 67) 上掲書, p.397.
 68) 上掲書, p.497.
 69) 上掲書, pp.501~502.
 70) 上掲書, p.503.
 71) 上掲書, pp.383~410.
 72) 上掲書, pp.418~419.
 73) 上掲書, p.523.
 74) 上掲書, p.524.

으로 기울여왔던 任那日本府說 등 古代 韓日關係史 研究의 마무리 작업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征韓論 이후 일본·조야의 朝鮮侵略·大陸進出에 대한 깊은 관심이 裏面에 숨겨져 있어서 國家政策的인 혹은 지식인들의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清日戰爭 後의 韓國史研究〉

清日戰爭이 일본의 勝利로 끝난 후, 그들의 朝鮮進出은 더욱 本格化되고 活潑해진다. 朝鮮進出의 역사적 근거를 古代 韓日關係史에서 제시받았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현실화시키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진출이라는 現實的인 狀況을 중요시한다면, 歷史研究는 古代史研究에서 近世史研究 쪽으로 차차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考古學的인 地表調査와 함께 각종 社會·地理·農産調査가 이루어지고, 學界와 言論界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의 한국시찰이 빈번해진다. 일본의 언론기관에서는 서울에 駐在員을 常駐시켰고, 駐在員들은 단순한 言論업무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고 광범하게 한국에 대한 情報를 수집하였다.

清日戰爭과 乙未事變이 끝난 후, 菊池謙讓의 《朝鮮王國》(1896, 明治 29년)이 간행되는데, 이것은 한국의 地理·社會와 最近世史를 현지의 실제적인 답사를 통해 저술한, 비교적 초기의 것에 속한다.⁷⁵⁾ 그 후 1900(明治 33)년에 林泰輔가 《朝鮮近世史》를 간행하였다.⁷⁶⁾ 이것은 《練藜室記述》에 의거하여 저술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 전의 《朝鮮史》 속에 포함시키려 했던 내용을 크게 補完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 저술로 근대적인 저술방법에 의한 韓國近世史가 나타난 셈이다.

日本人의 韓國史研究에서 清日戰爭은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古代史와 政治史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던 한국사연구가 清日戰爭을 계기로 近代史와 社會經濟史 중심으로 옮겨왔다. 한국진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던 한국사연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사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적극화하면서 한국사연구를 고대사에서 근세사으로 역사인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의 연구와 조사도 한층 활발하게

75) 菊池謙讓은 國民新聞 서울 特派員이 되어 ‘一面은 通信員으로, 一面은 大日本帝國의 志士’ 즉 스파이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약하다가 閔妃弑害에 가담, 廣島 監獄에 수감되었다. 거기서 半島問題에 관한 著述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朝鮮王國》이다(同書 蘇峰生의 序文 참조). 이 책의 내용은 總論, 地理部(白頭山係, 六大江 中原, 三面, 附錄으로 絶東의 人口, 仁川論·釜山論·元山論) 社會部(社會의 墮落 王室·貴族·常民·奴隸·都城·村落·巫女 及 淫祠教·佛教·儒教·社會情態 政治制度), 歷史部(七朝史概要-- 古朝鮮 東方의 家長國 三國分立 南北人消長 高麗, 近世史--大院君執政 上下·外戚과 大院君·十七年의 變·東方의 藩屏·東方二帝國·獨立扶植上下·十月八日·十一月二十八日 十一日事變 及 日露協定·東亞에 있어서 朝鮮·世界에 있어서 朝鮮)으로 구성되어 있다.

76) 林泰輔의 《朝鮮近世史》는 그의 말대로, 練藜室記述을 참고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의 引用書目에서 본대로 《練藜室記述》에 의한 것은 韓國側 資料에 局限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資料를 이용한 것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책의 著述을 위해 <東學黨>이래의 사실은 당시의 보고·신문 등 외에 關係者로부터 傳聞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술했다고 한다.

전개했다.

한국 및 대륙에 대한 사회경제면의 현지조사는 청일전쟁 전에도 陸軍參謀本部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었다. 1888(明治 21)년에 參謀本部에서 발간한 《朝鮮地誌略》이라는 책자가 바로 그런 것으로, 이 책자는 그들의 현지조사에다 文獻調査를 보완하여 꽤 자세하게 만든 地誌였던 것이다. 그런데 전에 참모본부 등에 의해 이뤄졌던 이 같은 비밀조사가 청일전쟁 후에는 民間 및 日本政府의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植民主義가 식민지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力點을 두어왔던 構造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당연하였다.

이런 무렵, 일본이 한국의 사회경제를 조사한 연구결과가 역사적인 관점과 農産적인 측면에서 선보이게 된다. 그 중 <韓國의 經濟組織과 經濟單位>라는 논문⁷⁷⁾과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가 특히 주목된다. 전자는 獨逸에 유학하고 돌아온 經濟史學者 福田德三이 1902년 여름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가서 쓴 것으로, 이 글에서 그는 한국의 封建制缺如說을 주장했다. 福田의 논문은 뒷날 日帝 官學者들의 주장인 植民主義史學의 停滯性理論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古典이 되었다. 이에 비해 後者は 1904년경부터 조사한 한국의 土地·農産에 관한 자료를 1907(明治 40)년 일본의 農商務省 農務局에서 출판한 것으로 日帝의 한국에 대한 經濟收奪의 기본자료가 되었다.

20세기 초에 정체성론이라는 식민주의 사학이 싹틈과 동시에 他律性論이라는 식민주의사관도 싹트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이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江戸時代부터 언급해 왔고 그것이 학설로서 정립된 것은 ‘南鮮經營說’ 혹은 ‘任那日本府說’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타율성론이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타율성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러일전쟁 후에 ‘滿鮮史觀’이 본격화하면서 타율성론도 한국사를 규율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처럼 발전하게 되었다. 만선사의 배경에는 일본이 만주에 진출하면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동경지사를 세우고 그 안에 滿洲地理歷史調査室을 두어 白鳥庫吉을 중심으로 만주와 조선반도의 역사를 일체화시키면서 조선사의 타율성이론을 안출해 냈던, 동양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만철 동경지사 등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언급할 겨를이 없거니와 중요한 것은 이들에 의해 창안된 만선사관이 한국사의 타율성론을 본격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선사관’이란 일본이 만주에 진출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역사적 문제들을 미리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 첫째 단계는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만주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장을 봉쇄하려는 역사적 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⁷⁸⁾ 둘째 단계는 중국사에서 떼어낸 만주사를 조선사와 한 체계 속에 결합하는 것으로 여기서 만선사의 체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말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면서 그들의 침략적인 야욕을 역사적인 연구와 함께 점증시켜 갔다고 할 것이다. 일제의 한국 강점에 앞서 그들은 정체성론과 만선사관 등의 타율성론을 통해 그들의 한국 강점을 정당화하는 역사이론을 강화시켜 갔다고 할 것이다.

77) <내외논총> 2-1, 3-6, 4-1, (1903~1904)에 게재되고, 그의 《경제학연구》 1915에 수록됨.

78) 李龍範, ‘韓國史의 他律性論批判’ 《亞細亞》 1969년 3월호

Ⅲ. 日帝强占期 韓國史 研究

〈日本人의 韓國史 研究〉

1910년 일제의 강점은 식민주의사관을 본격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한말에 이미 태동하고 있던 停滯性論·他律性論과 함께 日鮮同祖論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日鮮同祖論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太古以來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던 시기부터 간간히 흘러보내다가 1910년 ‘歷史地理’ 臨時增刊(朝鮮)號에서 본격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이 잡지에는 당시 일본의 유수한 역사지리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幣原担·星野恒·平井九馬三·久米邦武·關野貞·吉田東伍·荻野由之·大森金五郎·喜田貞吉·那珂通世·黑板勝美·三浦周行·岡部精一·田中義成·渡邊世佑·今西龍·辻善之助·金澤庄三郎·藤田明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일선동조론의 입장에서 일제의 한국 강점을 예찬하고 정당화하고 있었다.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면 일제의 강점은 잠시 헤어져 있던 같은 민족이 다시 결합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또 다른 민족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뿌리를 같이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日鮮同祖論’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한편 일제는 통감부 시절부터 교과서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 주목할 인물로 幣原土坦과 俵孫一이 있다.⁷⁹⁾ 幣原土坦은 1900년 9월 외부대신 박제순이 일본공사 林權助에게 요청하여 한국에 오게 된 인물로서,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의 직을 가진 채로 그 해 11월 관립중학교의 외국인 교사로 입국했다. 그 뒤 그는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학부고문으로 되었고 1905년 2월에는 학정참여관으로 한국 교육에 간섭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1906년 통감부가 시작되자 고문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사표를 내고 귀국하여 시학관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에 있던 1904년 《韓國政爭誌》(1907년, 三省堂 刊行)로 동경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俵孫一은 통감부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감 伊藤博文 밑에서 학정 사무를 장악하게 되었고 1907년 7월에는 한일신협약에 따라 학부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차관급)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幣原土坦은 한국에 있는 동안 관립중학교의 외국인 교사와 학부의 고문 및 참여관으로 있는 동안 동경대학의 《史學雜誌》 등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연구에 정열을 쏟는 한편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국연구회를 조직하여 한국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연구회담화록을 4권까지 간행했다. 학부 고문 및 학부 참여관으로 재직하면서도는 한국교육제도를 손질하고 교과서 편찬에 특히 신경을 썼다. 幣原土坦과 俵孫一이 학부에 관여하는 동안에 학부의 교과서 검정정책이 정치적 방면에서는 편협한 우국심을 고취하는 것은 금하고, 사회적 방면에서는 한국인의 사상을 변케 하는 내용은 금하며, 교육적 방면에서는 국가 의무 등을 논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들어 申采浩 등은 <국가를 멸망케 하는 학부>라고 통박했다.⁸⁰⁾

79) 崔惠珠, <幣原土坦의 顧問活動과 韓國史研究> 《國史館論叢》 79집(1998, 국사편찬위원회) pp.37~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정책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 幣原土圮의 한국사연구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는 《韓國政爭誌》를 간행했을 뿐만 아니라 《史學雜誌》 등에 게재한 논문 등을 수합하여 《朝鮮史話》(1924)도 간행했다. 그가 쓴 논문과 책에서 그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의 역사가 일본역사와 뗄 수 없는 역사적 관계에 있었음을 서술하여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키려” 했고, “그의 한국사 연구는 식민지배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사를 왜곡한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한국사의 타율성을 부각시키고 주체성을 부정”하는 한편 “한국의 말과 이름을 빼앗고 마음대로 유린해 온”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미화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된다.⁸¹⁾

〈總督府의 史料收去〉

強占 後 總督府는 한국의 사료를 수거하여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자기들의 조선사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적 사서에 대해서는 禁書政策을 폈다. 이것은 한국인을 야만시하면서 취한 식민정책으로서 한국인이 자기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일제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사료수거와 금압정책에서 보여준 일제의 식민정책은 서구 제국의 식민정책보다 더 강압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제가 ‘사료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사서와 고문서 등을 거둬들인 것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 차례에는 거의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첫 번째는 일제가 강점 후 곧 取調局을 설치하고 조선 통치를 위한 참고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舊慣制度를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朝鮮史의 편찬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 때 자료수집에 나서게 되었다.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일본의 헌병 경찰 및 조선인헌병보조원 등을 앞세워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서사·향교·서원·서당·古家·권문세가 등을 급습하여 거기에 소장되어 내려오던 … 각종 우리 민족고유 계통의 史書類와 申采浩 著 《乙支文德》 … 등 애국서적 약 51종 20여만 권을 탈취 燒却하여 버리고 이러한 서적의 판매를 엄금하고 그 소지자와 閱讀者를 처벌하였다”⁸²⁾는 것이다. 아마도 이 때에 민간에 전래되던 秘記類들을 포함한 전통적인 사서들이 대량 강탈되다시피 되어 소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의 조사와 수집 사업은 그 뒤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는데 두 번째로 대대적인 수집이 이뤄진 것은 조선사 편찬 사업이 1915년 중추원으로 옮겨진 이후였다. 이 때 한국측 자료 164종, 일본측 자료 100종, 중국측 자료 560종 그리고 서양측 자료 60종을 수집했다고 하나⁸³⁾ 그 책 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시된 숫자가, “1917년에는 오로지 사료의 수집에만 전력했다” “19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주로 자료수집에만 노력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이 예상외로 많아 예정된 편찬계획대로 일을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에 年限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⁴⁾고 한 그들 자신의 술화에 비춰볼 때,

80) 申采浩, <國家를 滅亡케 하는 學部>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pp.124~128

81) 최혜주, 위의 논문 p.62

82) 李相時, 《檀君實史에 관한 文獻考證》(가나출판사, 1987) p.30

83) 趙凡來,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初期 構造와 機能> 《한국독립운동사연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제6집, p.123-《朝鮮舊慣制度事業概要》 pp.139~140

정직하게 제시한 숫자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

세 번째로 사료수집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은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10개년 계획으로 조선사를 편찬하려고 할 때부터다. 이 계획은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선사편수회’로 확장 발전된 뒤에도 15년간이나 이어졌다. 1923년 1월 8일 제 1차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총독 齋藤實은, 자료가 “점점 湮滅되어 가고 날이 갈수록 그만큼 귀중한 것이 散逸되어져 문화의 흔적마저 상실해 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해야 한다고 혼시했으며, 편찬위원장이었던 有吉忠一 政務總監도 ‘朝鮮 全土의 모든 資料를 集大成’할 것을 당부했다.⁸⁵⁾ 이 때 수집하려고 한 방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pp.25~27)의 <朝鮮史編纂에 따른 古記録文書 등 보존에 관한 건>에 잘 나타나 있고, 1924년 12월 제 5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史料探訪 문제와 자료전람 문제를 두고 협의한 것을 보면 이 때도 상당히 많은 사료를 수집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었을 때에도 총독 齋藤實은 제 1차 위원회에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해마다 인멸되어 가는 귀중사료를 수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는데, 1928년에 소집된 고문·위원 간담회에서는 池上四郎 편수회 회장이 ‘예정한 목표량의 과반을 수집’했다고 할 정도로 활발하게 수집했다. ‘편수회’는 1926년 12월에는 <史料探訪內規>를 작성하고 일본·만주에까지 적극적으로 사료수집에 나섰다. 이렇게 探訪에 노력한 결과 1938년까지 2,800일에 수집사료 4,950책, 사진 4,510매 文券·畫像·扁額 등 453점을 수집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1926년 7월, 黑板勝美 고문은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對馬島로부터 고문서류 67,469매, 고기록류 3,576매 등을 수집했다. 이와 함께 조사원이 군청 등지에 가서 먼저 사료의 조사유무를 조사하고 군청직원을 동반하여 자료소장자를 면담하고 사료를 열람조사한 후 목록을 작성하고, 군청직원과의 연명으로 假借覽證을 작성하여 자료를 차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⁸⁶⁾

이렇게 총독 齋藤實과 委員長(會長)職을 맡은 政務總監 등이 전국도지사회의를 소집 개최하여 ‘사료보존에 관한 혼시’를 내리고 사료수집을 위해 군청과 경찰서에서 적극 협조토록 하는 등 사료수집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료가 매우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당국자의 推算에도 불구하고 史料所藏者들의 協助를 받는 것은 成功的이지 못했다. 조선사를 편찬하는 목적이 학술적이고 공평무사한 편년사를 修撰함에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과거 수년간의 경험을 들어서 “일부 조선인 사이에 이것을 오해하여 輕視하는 유감스러운 경향이 있어 사료수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편찬에도 지장이 적지 아니하다”⁸⁷⁾고 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한 가운데서도 당국자들이 만족할 정도로 다량으로 수집했다고 말했다면,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에 나타난 설명과는 달리, 사료를 強奪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일제 시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식민통치의 殘酷함을 통해서도 類推할 수 있다.

84)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1938) p.7

85)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1938) pp.9~10

86)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1938) pp.89~90. 그런데 하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 p.89에는 수집된 사료가 4,950책이라고 하였으나, 同 pp.93~94에 보이는 통계에는 <史料借入地方別冊數調>라 하여 4,950(총계에 4,990으로 되어 있으나 誤記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료를 ‘蒐集’하는 것과 ‘借入’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터인데, 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다.

87)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 p.28

史料收集 문제와 관련,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史料라는 史料는 대부분 거둬들었다고 했는데,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에는 ‘朝鮮史編纂委員會’ 시절인 1923년以後의 統計만 잡혀 있고 그 이전에 收集한 것, 즉 제 1차와 제 2차에 거둬들인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에는 中樞院에서 ‘朝鮮半島史’ 編纂을 위해 1917년에는 오로지 사료의 수집에만 전력했다고 했고 또 19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주로 자료수집에만 노력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이 예상외로 많아 예정된 편찬계획대로 일을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에 年限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춰본다면 상당한 양을 수거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다 중추원 이관에 앞서 제 1차로 총독부 取調局에서 거둬들인 ‘20만권’에 이르는 사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제 초기 무시무시한 무단통치 하에서 이뤄졌을 그 행태가 과연 舊慣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여기서해방 이후 ‘對馬島宗家文書’와 유리사진원관 등을 제외하고는 그 행태를 알 수 없도록 된 것은 그들의 자료수집이 단순히 ‘조선사’ 편찬에 있었을까를 의심케 한다. 8·15 직후에 그것들을 불태웠다는 증언이 있지만,⁸⁸⁾ 그들 자료가 국외로 반출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당시 수집된 자료를 아직도 활용할 수 없다면, 總督府의 史料收集이 뒷날 韓國人들에 의한 韓國史研究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辨明할 餘地가 없게 될 것이다.

〈朝鮮史 編纂〉

強占初期에 總督府 取調局에서 韓國의 舊慣制度 調査事業과 連繫하여 始作한 ‘朝鮮半島史’의 編纂事業은 1915년 中樞院으로 옮겨지면서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2년에는 ‘朝鮮史編纂委員會’로, 1925년에는 獨立의인 ‘朝鮮史編修會’로 넘겨졌다. 1916년 1월에 李完用 등 顧問 11명을 朝鮮半島史 調査委員으로 選任하고 中樞院 贊議 柳正秀 이하 15인에게 編史 事務와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업무를 맡기면서 시작된 編纂事業은 3월에 京都帝國大學의 교수 三浦周行과 강사 今西龍 및 東京帝國大學의 黑板勝美 3인을 囑託으로 삼고, 7월에는 이들 囑託들에 의해 ‘朝鮮半島史’의 編纂 意圖가 잘 드러난 <朝鮮半島史編纂要旨>가 작성되었다.

“... 이번에 中樞院에 명하여 朝鮮半島史를 편찬하게 한 것도 또한 民心薰育의 일단에資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저 식민지의 통치를 개론하는 자들은 新附의 인민을 교육하고 그들의 식견을 향상시켜 주는 일은 그들의 모국에 대한 충성된 사상을 함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반항의 기풍을 조장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常例이다. ... 이제 조선인에게 조선역사를 읽는 편의를 제공하면 그들에게 옛날을 追懷케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에 있는 野蠻半開의 민족과 달라, 독서와 屬文(文章)이 문명인에 뒤떨어지지 않는 민족이다. 고래로 조선에서는 史書가 많고 또한 새로이 저작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한 바 前者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 관계를 끊고 있어 독립국의 舊夢에 빠지게 하는 弊가 있고, 後者는 日淸 日露 간의 세력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이 나아갈 바를 실과하고 혹은 《韓國痛史》라고 하는 한 在外朝鮮人의 저서 같은 것은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妄說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사서가 인심을 심

88) 文定昌, 《軍國日本朝鮮強占36年史 中》(柏文堂, 1966) pp.485

히 蠱惑케 하고 있으므로 그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史書들을 絶滅시킬 方策을 강구한다는 것은 徒勞에 그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전과를 격려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차라리 舊史의 禁壓에 대신하기를 公明的確한 사서로써 함이 보다 淸淨이고 效果 또한 현저할 것인 즉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사의 편찬이 필요한 이유다. 만약 이와 같은 사서의 편찬이 없다면 조선인은 漫然히 合併과 關係없는 古史 또는 合併을 지주하는 서적만 읽게 되어 수년이 경과하면 당장 눈앞에 언제나 보던 습성에 적어 오늘날의 밝은 세상이 오로지 합병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함부로 舊態를 회상하여 도리어 改進의 力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조선인 同化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⁸⁹⁾

朝鮮半島史編纂要旨에 나타난 朝鮮史 編纂의 目的은 自明하다. 과거 韓國인이 편찬한 ‘朝鮮史’는 ‘獨立國의 舊夢’에 빠지게 하거나 國際間의 競爭關係 속에서 韓國이 나아갈 길을 제시함으로 민심을 蠱惑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史書를 強制로 絶滅케 하려는 것은 그 傳播를 激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으로 차라리 ‘公明的確’한 史書를 새로 써서 朝鮮人에 대한 同化의 目的을 達成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韓國사를 자기들의 뜻에 맞게 재구성해서 近代史학이라는 명분으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한편 韓國인들이 《韓國痛史》 같은 歷史書를 통해서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을 고취하려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編纂要旨와 함께 그들은 ‘公明的確’한 史書를 編纂하기 위해 몇 가지 編史原則을 세웠다. 첫째 朝鮮半島史의 時代區分은 제1편 上古·三韓, 제2편 三國, 제3편 統一新羅, 제4편 高麗, 제5편 朝鮮, 제6편 朝鮮最近世史로 하고, 둘째 敘述體制는 編年體로 하며, 셋째 史料는 朝鮮民族의 起源과 國家의 開創·形成에 이르기까지의 發展過程에 관해서는 이 나라 固有의 史話·史說 등은 一切 無視하고 오로지 記錄에 있는 ‘史料’에만 依存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의 이같은 意圖가 一貫되게 推進된 것은 아니다. 時代區分 問題만 하더라도 뒷날 整理된 《朝鮮史》는 결국 제1편 신라통일 이전·제 2편 신라통일시대·제 3편 고려시대·제 4편 조선전기(太祖~宣祖)·제 5편 조선중기(光海君~英祖)·제 6편 조선후기(正祖~高宗 31년) 등으로 정리되었지만, 그럼에도 일제 官學者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韓國사의 基本軸은 持續되었다고 할 것이다.

韓國史를 編纂하려는 日帝의 計劃은 1922년 12월 4일자 朝鮮총독부 훈령 제 64호 <朝鮮史 編纂委員會 規程>이 새로 공포되면서 10개년 계획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朝鮮史編纂委員會가 총독부 훈령(제 64호)에 의한 기구로서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關東大震災로 재정상황이 차질을 빚게 되자 朝鮮半島史 편찬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1925년 6월 총독 齋藤實은 역사편찬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상하게 되어 칙령 제 218호로 <朝鮮史編修會 官制>를 제정 공포하고 崔南善 등 조선인 史學者들을 포섭하는 등 편수진용을 재정비하여 12년 동안에 ‘조선사편수’를 완료하겠다고 새로이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조선사편찬위원회’의 발족 이래 1938년 3월까지 16년간의 기간과 90여만 엔의 경비를 사용하여 《朝鮮史》 35권을 비롯하여《朝鮮史料叢刊》(20종) 《朝鮮史料集眞》(3책)을 간행하게 되었다.

朝鮮史를 편찬하면서 나타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연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선의 주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檀君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또 일제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韓國사의 始源 문제를 가능한 한 수륙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료’에만 의존하겠다는 의도를 고집했고 사화·사실체의 수많은 사료는 편년체와는

89)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 pp.4~7

다르다는 이유로 제거했던 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편년체로 역사를 쓰겠다고 한 의도는 특히 檀君을 제외하는 데에 적절하게 이용했다.

일제가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檀君 관련 자료를 처리한 과정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 편수에 관여한 일제 관학자들은 단군 등 한국의 고대사 문제가 민족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군 신화 등 고대사의 많은 부분이 연대가 불분명하고 사화 사설에 속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해 왔다. 1923년의 제 1차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李能和는 조선의 상대문제와 관련 단군·기자·위만·발해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단군을 꼭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柏原昌三 같이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은 건국의 주요한 사항이므로 망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가진 위원도 있었으나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黑板勝美는 “단군과 기자에 관한 항목은 수록할 생각이 있지만 편년사의 방침에 따라 저절로 결정된 문제”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핵심을 피하고 있었다. 뒷날 편년사 편찬방침 때문에 단군을 수록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때 벌써 단군의 수록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진다.⁹⁰⁾

檀君 문제는 1932년 7월 조선사편수회 제 6차 委員會에서 崔南善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1934년 7월의 제 8차 위원회에서도 최남선이 진지하게 환기시켰다. 그러나 위원회 간사 稻葉岩吉과 顧問 黑板勝美는 단군을 수록하지 않기로 한 태도를 분명하게 했다. 단군과 기자 항목이 조선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최남선은 “正篇이나 補篇으로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을 편찬했으면 한다”고 했으나, 稻葉 간사는 “본회의 편찬방침으로 채택된 편년체 형식으로는 그것을 집어넣을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식으로 거절했다. 최남선은 이 대답에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은 그 事實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사상적 신앙적 측면으로 발전해 왔던 것을 한데 묶어서 別篇으로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黑板 고문은 “단군과 기자는 역사적 실재인물이 아니라 神話 속의 인물인 것으로, 사상적 신앙적인 측면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 편년사로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맞섰다. 그러나 최남선은 승복하지 않고 다시 “단군과 기자는 역사적 실재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그것은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만 적어도 조선인 사이에서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 편찬의 <조선사>에는 그것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우리들 조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會 編纂의 <朝鮮史>는 朝鮮人 사이에서는 잘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고 抗辯했다. 이에 대해서도 稻葉 간사는 “編年史로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再次 確認하고 折衷案을 제시하여 撫摩하려고 했다. 그것은 일찍이 檀君의 年代에 대해 상소한 바 있는 高麗朝 恭愍王 代의 白文寶의 項目에서나 檀君에 대한 제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 朝鮮朝 世宗 代의 항목에 檀君 문제를 수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熾烈한 論爭을 거친 後 今井田清德 會長은 檀君과 箕子에 대해서는 會議에서 論議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타당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폐회했다. 결국 檀君 問題는, 그 뒤 제 9차 위원회에서 稻葉 간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고려 말기의 白文寶 사망 기사에서 취급하게 되었다.⁹¹⁾ 이렇게 함으로 <朝鮮史>에서는 檀君이 그 年代를 알 수 없는 非歷史的인 存在로서 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다.

《朝鮮史》 편찬 등 總督府의 韓國史政策에 關與한 이들은 政務總監이나 中樞院 關聯者로서

90)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의 논쟁에 대해서는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 pp.19~25 참조

91) 위의 단군 논쟁에 대해서는 《朝鮮史編修會 事業概要》 pp.32~75 참조

當然職 委員 外에 今西龍·稻葉岩吉·松井等·栢原昌三·黑板勝美·三浦周行·笹川種郎·瀨野馬熊·岩谷武市·川口卯橋·萩原秀雄·園田庸次郎·前田耕造·丸龜金作·黑田省三·石原俊雄·松岡巖·田中半次郎·藤井誠一·小田省吾·池內宏·白鳥庫吉·津田左右吉·稻葉岩吉·高橋亨·中村榮孝·末松保和·關野貞·內藤虎次郎·田保橋潔·周藤吉之·田川孝三 등이 있었고 그 외에 渡邊勝美·青柳綱太郎·菊池謙讓·細井馨·北條亮英 등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으로는 李完用·朴泳孝·權重顯·李允用·李秉韶·尹甯求·李軫鎬·金東準·金容迪·李商永·鄭萬朝(經學院 副提學)·劉猛·魚允迪·李東鎭·孫永穆·嚴昌燮·金大羽·金秉旭·玄陽燮 등이 비교적 직책과 관련하여 참여한 듯하고 그밖에 洪熹·玄采·朴容九·陸鍾允·權重翼·金台斗·趙重觀·具瓚書·趙漢稷·尹瑤均·李能和·崔南善·李丙燾·申奭鎬 등이 재직기간은 다르지만 주로 編史職에 參與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간행된 《朝鮮史》는 檀君에 관한 문제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韓國史의 主體性을 意識하는 歷史書가 될 수 없었다. 일제 강점 후 해외에 망명한 사학자들은 國權回復을 목표로 한 한국사연구를 계속했고 그들의 저서들이 한반도 안으로 유입되고 있었는데 일제는 禁壓政策을 써서 이런 ‘不穩書籍’의 流布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런 禁壓政策이 오히려 ‘不穩書籍’의 유포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자기들의 기준에 입각하여 새로이 한국의 역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들은 ‘公明的確한 史書’와 實證에 충실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한국인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문화의 풍요성을 소개하는 이 나라 고유의 史話·史說 등은 무시해 버렸다. 그들은 또 한국인이 자기의 역사를 통해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제거하고 그 역사를 통해 사대와 굴종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은 교묘하게 포장하여 나타내려고 했다. 이렇게 《朝鮮史》의 간행 목적은 한국의 植民化와 韓民族의 同化에 있었던 것이다.

《朝鮮史》는 단순한 통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료집에 불과했다. 한 때 이 자료집은 기본사료로서 활용도가 높았고 다른 사료를 구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 또한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모든 사료를 망라한 듯이 보이는 이 책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사의 본질적인 문제나 민족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 의미에서 《朝鮮史》는 식민통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원대한 것이었다.⁹²⁾

《朝鮮史》 편찬이 1938년까지 계속되는 동안 조선총독부는 1936년에는 《朝鮮史のしるべ》라는 책을 간행했다. 總督府 官方文書課長인 시오타(鹽田正洪)가 쓴 이 책의 서문에는, 총독부 시정 25주년을 맞아 그 ‘숫자’에 인연해서 25장을 설정하고 조선 고금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이 책의 저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조선사편수회에 관여하고 있던 末松保和로 알려져 있다. 총독부 시정 25년의 숫자에 맞춘 25장은 <시대구분·반도의 서광·낙랑군의 消長·韓讖의 民·고구려의 강성·백제 신라와 임나·남북대립의 형세·신라의 강성·隋唐의 來征·신라의 통일·하대의 신라·고려의 國基·외난과 李崔 二氏의 專權·강화천도·元寇와 고려·고려로부터 李朝에·남북의 2문제·문헌정비·불교와 유교·朋黨의 禍·文祿 慶長의 役·明清의 祭·학문의 신경향·동양의 개항과 조선·통감과 총독 정치>로 짜여져 총독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했다. ‘고구려의 강성’에 앞서 ‘樂浪의 消長’을 언급하고, 삼국을 언급해야 할 곳에서 ‘백제·신라와 任羅’를 언급한 것, ‘朋黨의 禍와 文祿 慶長

92)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1966), p.135

의 役'을 강조하여 드러낸 것 등은 그들의 의도가 잘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낙랑군 시대'를 설정하여 중국의 지배를 강조하는가 하면, 단군 대신 기자를 내세웠다. 삼국의 건국을 4세기 후로 미루는가 하면, 일본의 직할영역으로 任那를 강조하고 신라 백제가 일본에 臣屬되었음을 주장한다. 중국·몽고·만주·일본에 대한 조선의 入朝·入貢을 강조하여 한국사의 非自主性を 강조하고, 문화적으로도 모방과 문화유입을 강조하여 독자적인 성격을 갖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이런 서술은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려 한 것이다.⁹³⁾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를 편찬하던 官學者들은 조선사편수회에 중사하는 한편 '朝鮮史學會'를 조직하고 이를 주도하여 1923~1924년에 《朝鮮史講座》를 간행하고, 이를 다시 시대별로 묶어 5권의 《朝鮮史大系》를 간행했다. 上世史(원시 상태~통일 신라 말)는 小田省吾가, 중세사(고려 시대)와 근세사(조선 초에서 철종조까지는 瀨野馬熊이, 최근세사(대원군의 섭정~한국의 '합병'까지는 杉本正介와 小田省吾가, 연표는 大原利武가 각각 저술했는데, 최근세사에는 그 부록으로 총독의 조선통치를 제 1편 중요기사, 제 2편 施政概要로 나누어 서술했다.

《朝鮮史大系》에는 이 책의 總序에서 조선사학회 회장 小田省吾가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고 강조하면서 上世史 卷末에 上世史 관련 자료목록⁹⁴⁾을 첨부하여 서술의 실증성과 객관성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上世史'의 목차와 시대구분에서도 이미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이 책의 목차에서 '2장 支那 통치 이전의 北鮮, 3장 지나의 군현, 5장 日本府 이전의 南鮮, 6장 일본의 세력 수립'이라는 것이 보일 뿐 아니라 서술 내용에서도 檀君 朝鮮을 부정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많이 보인다.⁹⁵⁾

이 밖에 일제강점기에는 한일관계를 다룬 개인적인 저서로, 池內宏의 '文祿慶長の 役'(正篇 1914, 別篇 1936)을 비롯해서 稻葉岩吉의 '日麗關係'(1933), 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1940)와 '朝鮮統治史稿'(1944) 등이 있다. 이 중에는 학문적으로 뒷날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있다. 이 시기에 일제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은 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弘文堂, 東京, 1940)과 金澤庄三郎의 '日鮮同祖論'(1928?) 등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사편수회를 포함하여 개인 저술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여러 권의 한국사 관련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이들 서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한국사가 단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특히 稻葉岩吉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 고대사의 상한선을 가능한 한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일본의 고대사 상한 문제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 문화의 후진성과 모방성을 강조하며, 넷째 외세의 침략과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한국인의 사대성을 강조하고, 다섯째 '당쟁'과 '세도정치' 같은 사회 내부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고 한국사의 밝은 측면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한국사를 통해서 한국인 스스로가 긍지와 자신감 대신 자기모멸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한국인의 독립의 의지는 더구나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일제의 관학자들은 한국사의

93) 《朝鮮史のしるべ》에 대해서는 李萬烈,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知性社, 1981) pp.270~274 참조

94) 《山海經史記》(宋微子世家)·《史記》(朝鮮列傳)·《前漢書》(地理志)·《前漢書》(郡國志)·《三國志》(魏志 濊韓)·《遼史》(地理志) 등이다.

95) 李萬烈,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知性社, 1981) pp.273~274 참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 혹은 합리화하는 역사관을 案出해냈는데 이를 식민(주의)사관이라고 한다.

〈植民主義史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체계화된 일제 官學者들의 한국사관은 한 마디로 식민[주의]사관으로 불려진다. 식민주의사관은 滿鮮史觀에 기초한 他律性理論과 停滯性理論, 日鮮同祖論 등으로 대표된다. 한말 일제하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타율성이론 혹은 타율성사관이다. 이것은 한국사가 한국인의 자율적인 결단에 의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외세의 타율적인 강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타율성이론이 만선사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한국 고대사에서부터 타율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들이 고고학에서 금석병용기를 강조한 것도 한국사의 파행적인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이는 이 시기 土着族이 석기를 사용할 때에 중국인이 침투한 곳에서는 금속기가 발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한국인이 三國遺事 이래 그렇게 주장해 오던 단군을 부정한 것은 한국사의 자주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단군에 대해 “그 설이 황당하여 믿지 못할 것”⁹⁶⁾이라고 한 것이나, “단군 조선이 반도 고대사의 한 시기를 劃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연구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⁹⁷⁾고 한 것은 실증사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기자 위만에 앞서 존재했던 독자적인 한국사를 부정하려는 것일 뿐 아니라 단군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상고사를 능가하는 식민지 한국사의 유구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편협한 역사인식의 발로이기도 했다.

단군을 부정하면서 그들이 강조한 것은 중국의 기자와 위만이 東來하여 조선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이었다. 위만 조선에 이어 漢 武帝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漢四郡이 약 4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사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은 그 여명기에서부터 외세의 지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를 안출해 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북쪽이 중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한강 남쪽은 일본의 神功王后의 정벌을 받아 수세기간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하는, 소위 일본의 ‘南鮮經營說’ 혹은 ‘任那日本府說’ 같은 것을 안출해 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 上世史는 북쪽의 支那와 남쪽의 일본이 한반도를 양분하여 지배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⁹⁸⁾

他律性論은 한국 고대사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 뒤의 한국사의 전 영역에도 적용하여 외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국사의 내재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들이 손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세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대결한 隋·唐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고려 때에는 끊임없이 명멸한 북방민족이 외세로 작용했고, 조선조에는 明朝는 물론이고 일본과 後金(淸)이 한국사를 움직이는 큰 변수였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조가 중국에 대해 중세적인 冊封·朝貢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屬邦 屬國’說을 주장하는데

96) 林泰輔, 《朝鮮史》 1권, p.19

97) 小田省吾, 《朝鮮史大系》 上世史, p.32

98) 《朝鮮史のしるべ》와 《朝鮮史大系》 참조

이 또한 植民史學의 他律性論을 답습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⁹⁹⁾

타울성론은 이렇게 한국사의 통사적인 이해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滿鮮史觀’과 같은 특수한 사관에서도 보였고, ‘事大主義論’이나 ‘한국사의 半島의性格論’ 등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滿鮮史觀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의 동양사학자가 일본의 대륙정책 곧 滿韓經營에 직접적·조직적으로 결탁해서 생겨난 것’¹⁰⁰⁾이다. 만선사관을 주장하는 동양사학자들은 ‘日鮮同祖論’ 같은 植民史觀을 비판했지만, 또 하나의 植民史觀이라 할 韓國史의 他律性論이 滿鮮史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滿鮮史觀은 중국이 만주에 대해 영토상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중국사에서 분리시킨 만주사를 한국사와 한 체계 속에 묶었던 것이며,¹⁰¹⁾ 일본의 만주지배를 합리화하면서 한국사의 독자적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었다.¹⁰²⁾ 이것은 곧 한국사가 체계면에서 독자성·자주성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에서도 한국사 연구의 역점이 고대사에 두어지게 됨으로 그 후의 한국 민족의 발전사에 역점을 두지 않게 되고 한국사를 일본의 대륙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이러한 史觀이 ‘滿鮮’ 關聯 一連의 論文을 發表했고 뒷날 ‘朝鮮總督府 修史事業의 主宰者’로 된 稻葉岩吉에 이르게 되면 “朝鮮 半島에 나타난 大事件을 하나같이 바로 東亞全局의 問題의 反影임을 말해 두고자 한다”¹⁰³⁾는 식으로 주장되면서 韓國史의 自主的 發展을 否定하는 他律性史觀을 만들었던 것이다.

滿鮮史觀과는 달리 韓國史의 他律性論을 주장한 것은 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弘文堂, 1940)에서다. 그는 이 책의 序說에서 <朝鮮史의 他律性>이란 제목을 버젓이 내걸고, 韓國史의 성격을 附隨性·周邊性·多隣性으로 규정했다. 그는 韓國史를 規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 ‘半島’라고 하는 地理的 條件이라고 보았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부수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에서 일어난 변동의 여파를 입음과 동시에 또한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本流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韓半島의 附隨性을 주장한 그는 “이같이 주변적임과 동시에 多隣의이었던 조선 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반대작용이, 혹은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미쳐서 아주 복잡다기한 양상마저 나오게 하고, 동양사의 본류로부터는 벗어나 있으면서, 항상 1개 내지는 그 이상의 諸勢力의 여파가 輻輳의으로 이치고, 때로는 2개 이상의 세력의 항쟁 하에 시달리고, 때로는 하나의 압도적 세력에 지배되었다든가 했다”고 하여 그 多隣性까지 아울러 指摘했다. 그 결과 韓國에서는 政治 文化에서 辨證法的 歷史發展의 足跡이 甚히 缺乏했다고 보았다.

이렇게 半島의 性格을 가진 韓國은, 예부터 支那의 典禮主義的·主知主義的 지배를 받아 이상적 蕃夷로서 칭찬받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滿蒙의 征服主義的·主意主義的 침략을 받았으나 그

99) 이 점은 2004년 6월 서울의 올림포스 호텔에서 가졌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하라타(原田環)씨가 발표한 중간발표 요약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00) 旗田巍 著, 李基東 譯, 《日本人的 韓國觀》(一潮閣, 1983) p.147. 滿鮮史觀에 대해서는 旗田巍, <滿鮮史의 虛像>(《日本人的 韓國觀》) pp.138~154 참조

101) 李龍範, <韓國史의 他律性論批判> 《亞細亞》 1969년 3월호

102) 旗田巍 著, 李基東 譯, 《日本人的 韓國觀》(一潮閣, 1983) p.152

103) 稻葉岩吉, <滿鮮史體系의 再認識> 《滿洲發達史》(改訂版, 1935) p.463-旗田巍 著, 李基東 譯, 《日本人的 韓國觀》(一潮閣, 1983) p.153에서 재인용. 稻葉岩吉의 일련의 논문인 <朝鮮의 文化問題>와 <滿鮮不可分の 史的 考察>은 그의 《支那社會史研究》 pp.271~314에 수록됨.

것은 ‘정치와 문화를 수반하지 않은 힘만의 征服이었다’고 指摘한다. 이러한 半島的 性格은 所謂 事大主義라는 한국사의 性格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되는 나라의 세력에 복종하고 그 권위 밑에 藩屬하고 의존주의에 의해서 국가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사에 나타난 이같은 事大主義는 親明派·從淸派·親日派·親露派 등을 생성시켰고, 정치 문화면에서 宗主國의 것을 模倣하는 他律的인 歷史를 展開할 수밖에 없었다.

三品彰英은 이렇게 事大主義的·他律的인 歷史를 전개해 온 한국이 일본의 情에 안김으로써 他律的인 半島史를 克服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여기에 韓國史를 他律的인 것으로 規定한 植民史觀의 意圖가 있다. 日本이 他律的인 韓國史를 克服토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면, 그들의 韓國 侵略과 支配는 韓國의 歷史를 통해 正當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후에 일본이다. ... 즉 고대의 우리 조선 경영에 있어서 또 최근세의 그것에 있어서도 함께 보이는 것과 같이 그것은 정복주의도 아니고,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백제나 임나를 보호하고, 그로써 그들에게 국가를 수립시켰고 그것은 진실로 평화적 애호적 지배라고 말해야만 할 것, 몽고와 같이 의지적 정복적인 것도 아니고 지나와 같이 주지적 형식적인 것도 역시 아니었다. ... 일본의 그것은 主情主義的 愛好主義的이고 彼我的 구별을 넘어선 보다 좋은 공동세계의 건설을 염원한 것이었다. ... 우수한 역사 세계를 건설했던 일본이 이 동포로서 저들을 안는(抱) 것은 그들을 그 古里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본연의 조선으로서의 재출발이 있다. ... 지금 그 역사를 볼 때 조선은 支那의 智에 배우고 북방의 意에 服하고, 최후에 일본의 情에 안겨져, 여기에 처음으로 반도사적인 것을 지양할 때를 얻었던 것이다.”¹⁰⁴⁾

이렇게 滿鮮史觀·半島的 性格論 등과 함께 등장한 他律性論은 韓國史가 黎明期부터 외세의 지배 하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개된 한국사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되어온 역사전개의 법칙이었다고 주장된다. 그것은 한국사의 대외관계만 규율해온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정치 문화의 제반 상황도 지배하게 되어 한국사 전체를 외세의존적이고 사대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한국인의 민족성마저도 사대적·의타적·의외적인 성격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이는 타율성사관을 식민지 교육에 원용하기 위해 안출해 낸 교묘한 이데올로기였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 노린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朝鮮獨立不能論이었다. 어차피 타율적인 역사를 전개할 바에야 文明開化하고 溫情的인 ‘일본의 품에 안기는 것’이 上策이고,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로 만족하면서 독립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었다. 他律性史觀은 이렇게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제거하려는 植民史觀의 典型이었다.

다음은 停滯性理論 혹은 停滯性史觀이다. 停滯性理論은 한국사가 정치 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라는 것을 엿볼 수 없는 정체된 역사를 온존시켜 왔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의 내재적인 발전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일본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써 기능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停滯性理論¹⁰⁵⁾은 福田德三이 처음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Leipzig 대학에서 Karl Buecher 교

104)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pp.6~7

105) 停滯性理論과 관련, 姜晉哲의 앞의 논문과, 旗田巍 지·李基東 역의 《日本人의 韓國觀》(一潮閣 1983), 金容燮의 <日帝 官學者들의 韓國史觀>[《思想界》1963년 2월호, 《韓國史의 反省》(역사학회)] 및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歷史學報》31, 1986], 趙東杰의 <植民史學의 성립과 정과 近代史敍述>[《歷史教育論集》제 13·14합집, 1990] 및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

수의 문하에서, 다음에는 Muenchen 대학의 Lujo Brentano 교수의 문하에서 3년 반 동안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경제학 및 경제사를 공부하고 1901년에 귀국하여 서구의 경제학을 일본에 도입·소개시킨 경제학자다. 그는 귀국한 이듬해(1902)에 한국을 방문하고 <韓國의 經濟組織과 經濟單位>라는 논문을 1903~04년에 걸쳐 발표하여 한국사의 정체성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아마 근대적인 경제사학의 방법론으로 쓰여진 한국의 경제사에 관한 최초의 학술논문’¹⁰⁶⁾으로 간주된다. 福田은 자신의 경제학 연구의 목적을 경제생활의 일정한 발전법칙을 탐구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화의 교환·유통에 입각하여 경제가 발전해 가는 제단계를 ‘自足經濟(村落經濟)’, ‘都府經濟(領域經濟)’ 및 ‘國民經濟’로 나누고 각 경제의 발전단계와 정치형태를 대비하여, 자족경제를 봉건제도가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로, 도부경제는 봉건제도에 대응하는 시기로 그리고 국민경제는 근대국가에 대응하는 시기로 보았다.¹⁰⁷⁾

福田이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결론은 20세기 초의 한국의 사회경제 상태가 자족경제의 단계에 속한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아직 봉건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의 自足經濟의 어떤 변태적인 양태(이를 ‘借金的 自足經濟’라고 했다.)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 단계는 일본에서는 鎌倉幕府 발생 이전의 藤原시대(9세기말~12세기 초)에 해당하고 유럽에서는 Salica왕조(814~1125)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20세기 초의 사회경제 상태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천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것이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필수조건인 봉건제도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¹⁰⁸⁾ 즉 근대국가 혹은 국민경제가 형성될 수 있는 불가결의 선행 필수조건이 바로 都府經濟 즉 封建制度의 단계인데, 한국은 20세기초에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福田에 의해 제창된 한국의 정체성론을 ‘封建制 缺如論’으로 부른다.

그는 한국과 같이 정체된 경제가 발전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래적(외래적)인 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 한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래적(전래적)인 존재는 러시아와 일본으로 보았으나, 러시아(슬라브)의 경우 한국과 같이 경제가 저급하여 그 협력으로 발전의 전기를 얻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일본의 힘에 의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露日戰爭(1904~05)의 前夜에 著名한 경제학자에 의해 이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다. 그것은 이 논문의 말미에서 그가, 自力으로 近代化할 수 없는 韓國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일본에 同化되어 일본의 힘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켜야 할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다고 자신들의 침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단위의 발전은 마침내 자발적인 것일 수는 없고, 전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전래적이란 어떤 다른 경제단위의 발전된 경제조직을 갖는 문화에 동화됨에 있다. … 한국의 토지를 개척 경작하여 서서히 이를 자본화할 수 있게끔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아는 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 많은 경제적 설비를 베풀고 수천년간 교통을 해온 결과 얻어낸 양해와 동정으로써 한인을 사역함에 익숙하고 또 한인의 토지를 사실상 사유로 삼아 서서히

究》(지식산업사, 1993, 재수록)], 李萬烈의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知性社, 1981) 참조
 106) 姜晉哲, 앞의 논문, p.168
 107) 姜晉哲, 앞의 논문, p.170
 108) 姜晉哲, 앞의 논문, p.170

농사경영을 시도하였으며, 더구나 그 생산품인 米·大豆에 대하여 최대의 고객인 우리들 일본인은 즉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자가 아닐까! 하물며 그 봉건적 교육은 세계사상에서 가장 完美的 것 중의 하나에 속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가장 집중적인 농업자요, 인간에 대해서는 한인에게 가장 결핍된 용감한 무사적 정신의 대표자인 우리들 일본 민족은, ... 아무런 봉건적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단위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그 부패희망의 극치에 달한 민족적 특성을 근거에서 소멸시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 동화시킬 자연적 命運과 의무를 갖는 有力優秀한 문화의 중대한 사명에 임하는 자가 아닐까!”¹⁰⁹⁾

福田에게서 시작된 한국사의 정체성 이론은 그 뒤 京都帝國大學 교수로 있던 黑正巖(1895~1949)과 京城帝國大學 교수였던 四方博(1900~1973)과 森谷克己(1904~1964) 등의 경제(사)학자들에 계승되면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주의 사관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黑正이 한국의 지방경제가 2천년간 진보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 정체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福田과 같이 ‘封建制 缺如說’을 주장했고, 四方博과 森谷克己는 동양 제국과 한국이 일본의 힘에 의해 ‘정체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들이 ‘봉건제 결여설’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해도 ‘韓國史의 停滯性論’을 주장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四方博은 해방 후의 일본의 식자층에서 거론하는 ‘植民地 美化論’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식민지 지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良心의 教授’로서 평가받기도 했지만, 한국사의 정체성론을 주장하는 면에서나 그 정체성을 벗어나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정체성론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는 정체성이론과 관련하여 <朝鮮에 있어서의 近代資本主義의 成立過程>(《朝鮮社會經濟史研究》 1933)과 <舊來의 朝鮮社會의 歷史의 性格에 就하여>(《朝鮮學報》 1·2·3집, 1946~1947) 등을 썼는데, 이들 논문에서 舊來의 한국사회는 발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체된 사회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근대화(자본주의화)하는 것은 일본 자본의 營養과 血脈에 의해서라고 갈파하였다. 특히 한국의 자본주의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는 세계사상 자본주의의 성립과정을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자기 사회의 진통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 자본주의의 자극에 강요되어 부득이하게 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인데, 전자는 서구의 경우이고 한국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四方博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자본주의화는 외국(일본)의 자본과 외국인(일본인)의 기술능력에 의하여 순수히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유는 개항 당시 한국내에서는 자생적인 자본의 축적도 없었고, 기업적 정신도 없었으며, 자본주의의 형성을 희망하는 사정과 그것을 필연케 하는 조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¹¹⁰⁾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자본주의화 혹은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그들의 침략과 수탈은 은폐되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화되고,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서 근대적인 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학교와 각종 시설을 설비하여 한국의 문명화를 도왔다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었다.

福田德三·黑正巖·四方博과 함께 한국사의 정체성을 주장한 官學者로 해방 당시까지 京城帝

109) 福田德三, <韓國의 經濟組織と 經濟單位>(《改訂經濟學研究》1915) p.147-姜晉哲, 앞의 논문, p.178~179에서 재인용

110) 姜晉哲, 앞의 논문, p.204

國大學 교수로 있었던 森谷克己를 지목할 수 있다. 그는, 앞의 세 사람이 ‘봉건제 걸어론’을 통해 한국사의 정체성을 주장한 데 비해, 일본인 학자로서는 최초로 한국에 봉건주의가 미숙한 형태로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이 같은 미숙한 봉건주의가 專制的 官僚主義的 國家體制로 전환·이행하는 것이 선명치 않고 그 안에 混入되는 형식으로 온존되었다는 것, 專制的 官僚主義體制가 灌溉農業의 기초조건이 되는 治水·水利와 村落協同體의 孤立閉鎖性이라는 두 조건에 기반했다는 것, 그리고 동양 내지는 아시아사회에서는 경제적 진보가 지극히 완만하여 停滯的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전체적 관료주의적 국가체제의 존립기반인 治水·水利 및 村落協同體의 문제에 기인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고, 결국 이러한 경제적 정체가 日本을 제외한 동양, 아시아 사회로 하여금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게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정체되어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동양이, 동양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봉건체제를 완성시킨 일본을 종주로 하여 그 指導下에 八紘一隅의 정신에 입각해서 구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 300년래의 植民地 半植民地的 桎梏에서 벗어나 정체적인 약순환으로부터 탈출하는 새로운 약진의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¹¹¹⁾ 그의 停滯性論은, 封建制缺如論을 주장한 福田과는 다른 데서 출발했지만, 뒷날 大東亞共榮의 이데올로기화하여 일제의 침략적 전쟁을 정당화함으로 그 전의 停滯性論者들 못지않은 植民史觀論者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체성이론은 이렇게 일제가 한국을 침략·강점하고 그것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으로 ‘식민주의 사관’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 이론은 처음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침략을 합리화하다가 일제 강점 하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화가 일본 자본의 영양과 혈액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일제 강점의 ‘施惠論’을 주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大東亞共榮圈을 부르짖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이 이론은 일본의 정치인과 사회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일제의 한국 지배 미화론 내지는 ‘聖戰論’으로 각색되어 지금까지도 일본의 침략행위를 은폐하는 역사의식으로 자리잡아 왔고 한국인에게는 때때로 둔화된 역사의식을 각성시키고 警責하는 이론으로 되어 왔다. 日帝強占期에 성행하여 식민정책에까지 활용한 植民主義史觀으로 日鮮同祖論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1910년 ‘歷史地理’ 臨時增刊(朝鮮)號에서 본격화하게 되었다고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日鮮同祖論은 明治時代부터 이미 간간히 언급되어 왔다. 이 때 주장된 내용은 《日本書紀》나 《古事記》의 기록을 근거로, 神代부터 일본이 우위를 차지한 채 양국이 서로 왕래하였으며, 일본의 始祖神 天照大神의 동생인 素戔鳴尊이 朝鮮의 지배자였다는 것,¹¹²⁾ 두 나라는 同祖 同種 同根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¹¹³⁾ 稻飯命은 신라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天日槍은 일본에 귀화하였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뒷받침되어 神功王后가 三韓을 정벌하여 ‘任那 日本府’를 설치하여 한국의 南方一帶는 일본에 복속되었다는 것과 삼국이 일본에 조공했다는 것

111) 姜晉哲, 위의 논문, pp.211~218

112) 여기에는 素戔鳴尊이 檀君이었다는 說과 素戔鳴尊의 아들 五十猛神을 檀君으로 보는 說이 있고, 관련하여 보이는 曾尸茂梨도 金海와 春川으로 보는 說이 있다.

113) 여기서 각종 주장이 보이는데, 吉田東伍는 조선반도에 있는 ‘陸種’과 ‘島種’의 두 인종 중 ‘島種’이 바로 일본과 同種이라고 보았고, 恒屋盛服은 《朝鮮開化史》(1901)에서 天降人種을 沖繩族, 大和(天孫)族, 出雲族, 扶餘族으로 구분하고 인종적 공통성을 가지는 이들이 조선반도와 요동반도에까지 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중 出雲族이 세운 식민국가가 신라라고 주장한다.

도 아울러 나타나게 되었다.

1910년 ‘歷史地理’ 臨時增刊(朝鮮)號에서 당시 일본의 우수한 역사지리학자들이 일선동조론의 입장에서 일제의 한국강점을 예찬, 정당화했지만, 강점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동안 이 주장은 한 동안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무마하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저지하는 한 수단으로 日鮮同祖論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 때 가장 일선동조론에 狂奔했던 역사가의 한 사람이 喜田貞吉(1871~1939)이었다.¹¹⁴⁾ 그는 ‘日鮮兩民族同源論’이라는 글에서 3·1운동 같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韓日同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水油相混의 不協和를 止揚하고 한일 양민이 같은 제국신민으로 혼연 융화하여 서로 영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1920년대 후반에 한국의 언어학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金澤庄三郎이 《日鮮同祖論》을 쓴 것도 같은 분위기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본다.

喜田貞吉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同祖·同根·同源임을 주장한다. 兩民族이 夫餘系라는 것, 夫餘 高句麗의 始祖說話에 나타난 天孫族과 일본 시조신화에 나타나는 天降族을 同源視하고 있으며 또 유물·언어·신화·풍습 등 여러 방면에서 양 민족은 同源·同種임을 밝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喜田은 일본민족을 구성하는 복잡한 요소에 대한 이해에도 부족했고 한 민족과 비교에도 신중하지 못했다.¹¹⁵⁾

日鮮同祖論은 韓日 兩民族의 人種學的 淵源을 캐는 데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日鮮同祖論은 일제의 한국 강점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었다. 喜田이 ‘日韓兩民族同源論’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병합은 결코 이민족을 새로이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때 떨어져 있던 것을 본래대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논리가 ‘日韓兩民族同源’에 근거해 있다면, ‘日鮮同祖論’이 일제의 한국 강점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선동조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이 이뤄지던 때에 강렬하게 대두했다가 한 동안 잠잠했다. 3·1운동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일선동조론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3·1운동으로 한국 독립운동이 격화되고 일제의 한국 강점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일제 관학자들은 그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던 일선동조론을 꺼내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이론으로 등장시켰다. 그 후 식민주의 한국사관이 타율성사관과 정체성사관으로 정리되고 있을 때에도, 일선동조론은 일제의 한국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內鮮一體’에 동원되었고 만주사변 이후에 전시체제가 강화될 때에는 ‘皇國臣民化運動’ 즉 ‘韓民族抹殺政策’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114) 喜田貞吉 및 그의 日鮮同祖論에 대해서는 李萬烈의 <古代韓·日關係論의 檢討>[《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知性社, 1981) 所收] 및 朴杰淳의 <喜田貞吉의 韓國觀 비판>[《國史館論叢 제100집》(국사편찬위원회, 2002) 所收] 참조. 喜田貞吉은 3·1운동 후에 ‘日本民族이란 어떤 것인가’, ‘朝鮮民族이란 어떤 것인가’, ‘韓國併합과 國史’ 등을 발표하고 이를 종합하여 同源社(서울)가 간행하는 <同源>이라는 잡지 제 3호(1919년 12월호)에 ‘日鮮兩民族同源論의 梗概’를 발표했으며, 다시 이 글을 증보하여 자신이 주필로 있는 《民族과 歷史》(6권 1호)에 ‘日鮮兩民族同源論’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115) 이 점에 대해서는 이만열, 앞의 논문 참조

IV. 맺는 말

筆者는 ‘近現代 韓日關係研究史’라는 연구과제를 일본인 연구자들이 韓末·日帝強占期에 修行한 韓國史 및 韓日關係史 關聯 研究에 限定하여 살펴보았다. 研究課題가 廣範하여 筆者의 力量을 넘어서는 데다가, 같은 시기에 韓國人 研究者들이 韓日關係史 및 日本史를 두고 研究한 것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韓國學 研究는 이미 江戸時代부터 시작되었는데, 朱子學者들, 古事記·日本書紀 같은 일본고전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연구도 곁들였던 소위 國學者들 그리고 海防論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국학자들의 사고가 幕府 말기의 征韓論과 明治期の 한국 침략·병탄·지배의 유력한 관념으로 발전되어 갔다.

韓末·明治期の 한국사연구는 東京大學의 전신인 帝國大學에서 史學科(1887)와 國史科(1889)가 설립되고 《史學會雜誌》가 간행되는 시기에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明治期에 한국사연구가 시작된 것은 근대학문을 위해 설립된 帝國大學에 의해서가 아니고 대륙진출을 위해 설립된 參謀本部에 의해서다. 이것은 明治期の 한국사연구가 당시 일본의 大陸進出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參謀本部 編纂課는 1882년에 <任那考>와 그 附錄<任那國名考>라는 稿本을 만들었고 거의 같은 무렵에 만주에서 廣開土大王碑文의 榻本을 가져와 연구하기 시작했다. 參謀本部의 廣開土王研究는 그 뒤 菅政友·那珂通世·三宅米吉의 廣開土大王碑文 研究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때 日本人 學者들은 廣開土王碑文 研究를 통해 ‘古代日本の 韓國出兵 南韓支配를 立證하’기 위해 노력했고 古代日本の 南韓經營說 및 任那日本府說을 正當化했다는 것이다.

日本の 近代歷史學은 明治 초기 西洋의 영향을 받아 文明史觀으로부터 시작하여¹¹⁶⁾ 1882년 前後한 時期부터 차차 考證史學으로 발전했고, 1880년대 帝國大學에 史學科와 史學會가 設立되었을 무렵에는 ‘考證史學의 最盛期’에 이르렀으며,¹¹⁷⁾ 1890년대에 考證史學으로부터 理論史學으로 轉換하면서 소위 아카데미즘 史學이 成立되고 近代的 歷史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¹⁸⁾는 것이다. 이 무렵 일본의 考證史學은, 韓國史研究에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본다면, 史料批判의 形式을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 嚴格한 史料批判을 거치지 않았다. 그 예로, 任那日本府說이나 南韓經營說이 近代史學의 課題로 登場할 때 元資料인 《日本書紀》등에 대한 嚴正한 史料批判이나 이들 주장에 대한 徹底한 考證이나 贊反討論을 거치지 않고 無批判的으로 學界에 登場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의 ‘考證’은 羅列爲主의 煩鎖한 引用을 넘어서지 못하고, 簡潔·核心的인 史料의 引用 대신 博學廣涉을 자랑하듯 煩多히 引用하는 데에 그쳤다. 羅列爲主의 考證的 方法論

116) 小澤榮一, <明治時代の歷史思想>, 《日本における歷史思想の展開》(日本思想史研究會編, 1965, 吉川弘文館) 所收, pp.243~272.

117) 權達天, <日本近代史學의 成立에 관한 研究>上, 下 (《釜山大人文論叢》 제22·24집, 1982년 6월, 83년 12월) 所收, 同論文下, p.395에는 “考證史學의 弊端이라는 제목의 講演에서 1901년에 久米邦武가 史學會 設立當時의 考證史學의 最盛期였다고 회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118) 權達天, <日本近代史學의 成立에 관한 研究> 下, p.398.

이 止揚되는 것은 津田左右吉과 白鳥庫吉에 이르러서다.

韓末·明治期는 또 南鮮經營說 및 任那日本府說과는 달리 江戸時代 以後에 國學的 傳統을 이어받았던 星野恒·重野安繹·久米邦武 등이 《國史眼》을 저술, 日鮮同祖論의 입장에서 日本과 韓國과의 歷史的 關係를 追究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한말에는 한국 민족의 구성을 검토하면서 鮮卑族 등을 한국사에 편입시키고 이들 종족과의 투쟁에서 高句麗 등이 패배한 것을 들어서 한국사 他律性論의 序論의 體系化가 試圖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朝鮮史》를 쓴 林泰輔 등에서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무렵에 著述된 歷史書로서는 林泰輔의 ‘朝鮮史’와 吉田東伍의 ‘朝鮮古史斷’ 등이 있어 後代에 크게 影響을 미쳤고, 그밖에 ‘史學雜誌’ 등 學術誌에 韓國史와 韓日關係史 關聯 論文들이 많이 掲載되었다. 그 중 林泰輔가 著述한 ‘朝鮮史’는 그 敘述의 內容과 體制面에서 다른 史書들과는 差別性이 있었다. 韓末 玄采 등 韓國의 歷史編纂者들 중에는 林泰輔 등의 歷史敘述을 無批判的으로 收容하여 ‘任那日本府說’이나 神功后的 ‘南鮮經營說’ 등을 그들의 저서에 옮겨 놓았다.

日本人의 韓國史研究에서 淸日戰爭은 하나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주었다. 古代史와 政治史를 중심으로 하여 展開되던 韓國史研究가 淸日戰爭을 계기로 近代史와 社會經濟史 方向으로 擴大되었기 때문이다. 韓國進出의 名分을 確保하기 위해 필요했던 韓國史研究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을 植民地化하기 위한 현실적인 代案을 제시할 수 있는 韓國史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菊池謙讓의 ‘朝鮮王國’(1896)이 간행되고 林泰輔의 ‘朝鮮近世史’가 간행(1900)되었으며 日本의 農商務省은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를 간행했다. 1904년 露日戰爭 直前에는, 獨逸에 留學하고 돌아온 經濟史學者 福田德三이 ‘韓國의 經濟組織과 經濟單位’라는 論文을 썼는데 韓國의 ‘封建制缺如說’을 주장함으로써 植民主義史學에서 重要視되는 停滯性理論을 構築해갔다.

日帝強占期에 앞서서 停滯性理論의 基礎가 다쳐지는 時期에 他律性理論도 土臺를 잡아갔다. 滿鐵 東京支社에 설치한 滿鮮歷史地理研究 기관은 白鳥庫吉을 중심으로 滿洲와 朝鮮半島의 歷史를 一體化시키면서 朝鮮史의 他律性理論을 案出해 냈다. 한편 1910년 ‘歷史地理’ 臨時增刊(朝鮮)號에서 당시 일본의 우수한 역사지리학자들이 총망라되어 ‘合邦’이 日鮮同祖論의 理想을 실현한 快舉라고 賞讚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 초기에 이미 정체성이론, 타율성이론 및 일선동조론 등의 식민주의사관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強占後 日帝總督府는 韓國 史書에 대한 禁書政策을 펴는 한편 大家 등에 傳統的으로 所藏되어 있는 史書를 收去하여 일부는 燒却하고 일부는 자기들의 朝鮮史研究에 활용했다. 일제 強占 後 海外에 亡命한 史學者들은 國魂(얼·郎家思想·心 등)중심의, 國權回復을 목표로 한 한국사연구를 계속, 저서의 일부가 한반도 안으로 유입되었다. 禁書政策이 오히려 不穩書籍의 流布를 擴大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判斷한 總督府는 자기들의 기준에 입각한 朝鮮史를 편찬하여 ‘不穩書籍’의 遮斷하려고 했다. 朝鮮史編修를 위한 機關을 만든 것은 이 때문이다. 朝鮮史編纂委員會(1922)를 거쳐 朝鮮史編修會(1925)가 설립되어 조직을 정비하면서 1932년부터는 朝鮮史·朝鮮史料集眞·朝鮮史料叢刊 등을 간행했다. 植民地 朝鮮에서 朝鮮史研究에 종사하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朝鮮史學會를 조직하고 이들 주도하에 ‘朝鮮史講座’를 간행하는 한편 이를 시대별로 묶어 朝鮮史大系를 간행했다. 植民主義史觀에 立脚한 朝鮮史編纂은 이렇게 進行되고 있었다.

朝鮮總督府는 앞서 말한 이러한 책들을 간행하는 한편 1936년에는 그들의 시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朝鮮史のしるべ’라는 책을 ‘25장’으로 짜서 간행했다. 이 책은 時代區分에서 ‘樂浪郡

時代'를 插入하여 中國의 支配를 強調하는가 하면, 檀君 대신 箕子를 내세웠다. 삼국의 건국을 4세기 후로 미루는가 하면, 日本의 直轄領域으로 任那를 강조하고 新羅·百濟가 일본에 臣屬되었음을 주장한다. 중국·몽고·만주·일본에 대한 조선의 入朝·入貢을 강조하여 한국사의 非自主性を 강조한다. 문화적으로도 모방과 문화유입을 강조하여 독자적인 성격을 갖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 한국사의 他律性を 강조하고 조선의 식민지화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일관계를 다룬 개인적인 저서도 없지 않았다. 池內宏의 '文祿慶長の 役'을 비롯해서 稻葉岩吉의 '日麗關係', 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와 '朝鮮統治史稿' 등이 있다. 이 중에는 학문적으로 뒷날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있다. 이 시기에 문화사적 측면에서 일제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은 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과 金澤庄三郎의 '日鮮同祖論' 등을 들 수 있다.

日帝強占期에 體系화된 韓國史觀은 滿鮮史觀에 기초한 他律性理論을 비롯해서 停滯性理論, 日鮮同祖論 등으로 대표된다. 他律性理論은 한국사가 한국인의 자율적인 결단에 의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외세의 타율적인 강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의 自主性を 부정하는 것이다. 停滯性史觀은 한국사가 정치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社會經濟的인 측면에서는 발전이라는 것을 엿볼 수 없는 정체된 역사를 온존시켜 왔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의 내재적인 발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일본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기능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日鮮同祖論은 日鮮同種論·日鮮同根論·日韓一域論 등으로도 불려지는 것으로 앞서의 他律性理論과는 相異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이 이뤄지던 1910년부터 강점기간 동안 한국인에게 일제에 대한 忠誠을 강요하는 이념적인 근거로서 작용했다. 比較的 強占初期에 내세웠던 內鮮一致論을 비롯해서 戰時體制를 強化하기 위해 내세운 皇國臣民化運動은 그 본질이 조선민족 말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바로 日鮮同祖論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韓末·日帝強占期에 日本人에 의한 韓國史 研究는, 研究方法論이나 敘述體制面에서는 近代 歷史學에 접근하고 있어서 韓國人 研究者들에게 다소 肯定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그들의 歷史認識이나 歷史意識面에서는 日本의 韓國進出과 그 植民地化를 正當化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否定할 수 없다. 이른바 植民主義史觀으로 지칭되는 他律性史觀과 停滯性史觀, 日鮮同祖論은 바로 그런 歷史意識의 所產으로, 앞으로 互惠平等의 未來指向의인 韓日關係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解放 後 韓日兩國의 研究者들이 노력해 온 바와 같이, 霸權強權主義가 亂舞하던 舊時代의 植民主義史觀을 克服하고, 韓國에 대해 따뜻한 愛情을 가진 새로운 韓國史像을 樹立하는 것은 이 方面 研究者들이 繼續 苦悶하면서 이룩해야 할 課題가 아닐 수 없다.